C2005-5 / 2005. 5.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의미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정 정 길 연 구 위 원
이 재 옥 선임연구위원
이 현 주 초 청 연 구 원

연구 담당

정 정 길	연 구 위 원	연구총괄, 제3장, 제4장 3절, 제5~6장 집필
이 재 옥	선임연구위원	제2장, 제4장 집필
이 현 주	초청 연구원	자료 정리

머 리 말

중국은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WTO 가입을 통해 1978년의 개혁 개방에 이은 제2의 개혁 개방을 표방하면서 세계화를 통한 중국경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비시장경제국의 지위로 WTO에 가입함으로써 인해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심한 수출 견제를 당하게 되자 비시장경제국 지위가 수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타 WTO 회원국을 상대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중 양국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자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중요한 통상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는 양국간의 중대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고,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을 때 국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기존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우리 정부의 대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관한 정책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나아가 중국의 저가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고 피해 발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방안 마련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5.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이 연구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고,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을 때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나아가 반덤핑제도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기존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의 부여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이다.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했을 경우 중국의 덤핑행위에 대하여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중국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3국의 자료를 사용한 정상가격 산출을 기초로 삼아 중국산 농산물의 품목별 덤핑마진과 반덤핑관세의 수준을 계산하고 반덤핑조치를 단행했을 경우 국내농업 보호 효과를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했을 경우의 비용으로 간주하였다. 계측 결과 우리나라가 만약 제3국의 수출가격을 덤핑판정의 기준가격으로 설정하여 액면 그대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 농업의 보호 효과는 22억원으로써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이나 무역액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국의 수출가격과 중국산 수출가격의 격차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대적인 비교우위와 경쟁력에서도 비롯되는 바가 큰 것일 가능성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흑자 지속에 따른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인해 액면 그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이 연구에서 계상된 시장경제 인정 시 국내농업의 보호 효과 상실 부분은 다소 과대 계상된 면이 없지 않다.

둘째, 현행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안이다. 개방정책과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긴급수입제한조치(SG, SSG, TSG), 반덤핑 관세조치 및 상계관세 제도

가 있으며, 이들 조치는 제조요건, 신청인 자격, 처리기간, 운영목적, 대응조치 등이 상이하므로 산업피해의 발생원인에 따라 각각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제도는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될 때 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해당물품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된 특별관세제도이다. WTO 반덤핑협정문은 특히 비시장경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정상가격은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라 볼 수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출할 수 없는 점을 인정, 비시장경제국가의 가격특성을 고려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중국의 덤핑행위에 대하여 조사 방법상 적용할 수 있는 정상가격만을 뿐 여전히 반덤핑관세조치는 취할 수 있다.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은 기존 GATT 1947 제19조의 규정을 명료화시킨 것으로 무역 상대국의 공정무역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나 수입국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다. 회원국의 심각한 피해의 방지나 구제 또는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 또는 보조금을 이용할 재량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제도운용상 상당한 신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기간이 원칙적으로 4년, 그리고 연장하는 경우에도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시적 세이프가드(TSG)제도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6절에 명시된 제도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WTO 회원국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제도이다. 특정국가에 대하여 이와 같은 특수한 제도를 도입

하게 된 배경은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최혜국대우를 받게 되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수입국 입장에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TSG는 비록 중국의 WTO 가입 시점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일반 SG에 비해 제조요건이나 처리기간 등 제도운영상 더욱 많은 신축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중국의 덤핑행위에 대하여 조사 방법상 적용할 수 있는 정상가격만 다를 뿐 여전히 반덤핑관세조치는 취할 수 있으므로 반덤핑관세조치를 비롯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SG),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SSG),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TSG) 등 제도를 산업피해의 발생원인에 따라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구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저가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무역위원회 내 연구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농업전문가를 확보하여 농산물 수입피해구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meaning of granting Market Economy Status to China and its impacts on Korea's Agri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lidity of granting Market Economy Status(MES) to China and to measure its effects on domestic agriculture, and furthermore, to find out how to utilize the existing Industrial Damage Relief Systems allowed by the WTO such as Anti-Dumping and Safeguard measures.

Granting MES to China means that Chinese domestic prices should be regarded as normal prices when Anti-Dumping margins are calculated. In this study, we calculated dumping margins of major agricultural products imported from China based on the price data of third countries. We considered the protection effects of Anti-Dumping measures based on the third country data as the costs of granting MES to China because Korea will lose the opportunities to utilize Anti-dumping measures regarding China as non-market economy.

The protection effects of the Anti-Dumping measures invoked in this way is estimated about 2.2 billion Korean won. This amount is not enormous compared with th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rade. In other words, this means that the impacts of granting MES to China on the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is expected to be small.

There are four types of Industrial Damage Relief System such as Safeguard, Special safeguard(SSG), Transitional safeguard, Anti-Dumping Dut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Even though Korea grant the MES to China, there is only difference in normal price to be quoted for the calculation of dumping margins. Korea still can take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if it exports under the domestic prices.

To prevent negative effects caused by the rise in imports of cheap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nd to minimize trade dispute between two countries, the legal and systematic problems of existing industrial damage relief system should be improved. Korea should operate safeguard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ake advantage of expected injury rather than resulted injury as the condition of invoking the safeguard measures. Besides, the function of research and survey in the trade committee should be reinforced for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industrial damage relief

viii

system. In particular, agricultural experts are needed in the trade committee for the exact evaluation of the situations related to safeguard measures.

Researchers: Chung-Gil Chung, Jae-Ok Lee, Hyun-Ju Lee
E-mail Address: cgchung@krei.re.kr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3
4. 연구 결과의 활용	3
제2장 시장경제지위의 개념과 관련 규정	4
1. 시장경제 판정의 기준	4
2.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	6
3. WTO 반덤핑협정문	9
4. 주요국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규제	12
5.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16
제3장 중국의 농정개혁과 농촌시장경제 발전	26
1. 최근 중국의 농업·농촌 시장경제개혁 추진 상황	26
2.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농촌시장경제 발전	39
제4장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7
1. 한·중 농산물 무역의 추세와 문제점	57
2. 우리나라의 반덤핑 제도와 사례	89
3. 중국농산물에 대한 타국의 반덤핑 제소 사례	92
4.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96

제5장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따른 대책	103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상호 비교	103
2.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류와 주요 내용	106
3.	세이프가드의 활용방안	116
제6장	요약 및 결론	121
1.	요약	121
2.	결론	129
	참고 문헌	131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국가와 사유	8
표 2- 2. 미-중 간 주요 품목의 관세율 합의내역	20
표 2- 3. 미-중 간 주요 품목의 시장접근물량 합의 내역	21
표 2- 4. EU-중 간 주요 품목의 관세율 합의내역	21
표 2- 5. 중-일간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 합의내용	22
표 2- 6. 한·중 농산물 관세 인하 협상 결과	24

제3장

표 3- 1. 2001-2003년 1급 행정촌의 종합생산경영상황	44
표 3- 2. 현금수지가 가정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45
표 3- 3. 농촌의 업종별 수익 구성	46
표 3- 4. 농민의 수입원 구성	46
표 3- 5. 2003년 행정촌 노동력의 유출 노동력 취업상황	49
표 3- 6. 2003년 농촌의 고정자산 투자 상황	52
표 3- 7. 2001-2002년 행정촌의 생산성 고정자산의 귀속	52
표 3- 8. 국가재정의 농업에 대한 지출구조	54

제4장

표 4- 1. 우리나라의 부류별·품목별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58
표 4- 2. 주요 국가별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59
표 4- 3. 대중국 농축임산물 수출입 동향	60
표 4- 4. 대중국 농산물 유별 수입 현황	61
표 4- 5. 대중국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입 현황	62

표 4- 6. 중국의 농축산물 무역구조 변화	64
표 4- 7. 중국의 주요 품목별 농축산물 수출동향	66
표 4- 8. 품목별 중국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68
표 4- 9. 주요 농산물 생산비 국제비교(1997~98년)	73
표 4-10. 중국의 쌀 수급 추이	74
표 4-11. 중국의 옥수수 수급 추이	75
표 4-12. 중국의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77
표 4-13. 중국의 주요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2003)	78
표 4-14. 중국의 채소 수급 전망(2005~2015)	78
표 4-15. 우리나라 대중국 배추 수입 추이	79
표 4-16. 우리나라 대중국 무 수입 추이	80
표 4-17. 우리나라 대중국 오이 수입 추이	81
표 4-18. 우리나라 대중국 고추 수입 추이	81
표 4-19. 중국산 고추의 국내도매 가능가격	82
표 4-20.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의 품질 비교	83
표 4-21. 우리나라 대중국 마늘 수입 추이	83
표 4-22. 중국산 마늘의 국내도매 가능가격	84
표 4-23. 우리나라 대중국 당근 수입 추이	85
표 4-24. 우리나라 대중국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수입 추이	86
표 4-25. 중국의 주요 수출전망 품목	88
표 4-26. 미국의 대중국농산물 반덤핑 제소 사례	93
표 4-27. 한국의 대중국 주요 농산물 수입 추이	99
표 4-28. 주요 중국산 농산물의 제3국과의 수출가격 비교(1999~2003)	100
표 4-29. 덤핑관세 부과 시 국내 가격 및 경지면적의 변화율	101
표 4-30. 덤핑관세 부과 시 농가소득 변화율	102

제5장

표 5-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비교	104
표 5- 2. 마늘 세이프가드 발동 경과와 조치	113
표 5- 3. SG와 TSG의 상호 비교	118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말 중국은 세계화를 추구하며 힘찬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주력하였다. 중국은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곧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실현시키면서 1978년의 개혁 개방에 이은 제2의 개혁 개방에 착수하였다.

중국은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NME) 지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 EU 등으로부터 지난 2년간 총 96건의 덤핑 판정을 받는 등 심한 수출 견제를 당하게 되자 이들 국가에 비시장경제국 지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WTO 가입 당시 향후 15년 동안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유보하는데 동의하였으나 국제무역상에서 반덤핑 제소에 잇따라 피소되는 등 비시장경제국 지위가 수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미국, EU, 호주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인정 문제가 한중 양국 간의 경제통상협력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4월 1일 우리나라에 자국의 시장경제국가로서의 지위 인정을 처음으로 공식 요청하였고, 이어 2004년 10월 ASEM 정상회의 때 중국 총리(원자바오)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함으로써 이 문제가 한중간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부각되었다. 이 밖에도 제11차 한중경제공동위원회(2004. 6. 17), 한중 통상장관회의(2004. 9. 4), 중국 상무부 부부장 방한(2004. 9. 30), 제3차 한중투자협력위원회(2004. 12) 등의 기회를 통해 자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통상파트너로서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요청을 경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인정한다면 국내 농업과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지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고,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을 때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으로는

- 첫째, 시장경제지위의 개념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 둘째,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건을 파악하며,
- 셋째,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가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 넷째, 기존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3. 연구 방법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시장경제지위 논의와 관련된 각종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중국의 농업 및 무역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중국의 농업 개혁과 시장경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농산물 가격체계 등 시장경제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 상황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비교 분석을 위한 중국의 농산물 가격자료도 수집하였다.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기 위하여 계량적 방법을 응용하였다. 즉,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따른 반덤핑조치권리 상실의 비용(국내농업보호효과의 상실)을 계측하였다.

4. 연구 결과의 활용

이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첫째, 이 연구 결과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요구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요구대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경우 우리나라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향후 농정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이후 국내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 강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시장경제지위의 개념과 관련 규정

1. 시장경제 판정의 기준

세계의 시장경제 국가들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의 운영 체계가 상이한 관계로 비록 시장경제라고는 하지만 서로 상이한 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라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분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주요국들이 반덤핑 조치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들을 비시장경제로 판정하는 기준 중에서 공통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Stoler 2003).

1.1. 정부의 역할

미국과 EU는 시장경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정부가 경제와 산업활동에 개입하는 정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즉, 정부의 자연자원, 자본, 인적 자원 등에 대한 소유, 분배, 통제를 통하여 정부가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개입하는가를 시장경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부가 기업의 소유를 통해 모든 형태의 생산 활동에 대한 의사를 결정함은 물론 생산물의 국내 유통과 국제 간 무역을 통제하는 국가는 시장경제국이 아니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기업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등이 시장경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1.2. 기업의 권리와 행위의 특성

미국의 상무성은 특정국가의 시장경제성을 판정하면서 정부가 일반기업의 생산량과 가격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기업운영의 독립성, 이익의 배분, 기업의 상업적 계약 추진의 독립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국제적 회계규정에 따르고 있는지, 수익의 해외송금이 자유로운지,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1.3. 생산요소의 원가와 가격의 결정

미국의 상무성은 자원의 배분에 대한 정부의 통제, 생산요소 가격의 시장기능에 의한 결정 여부 등을 시장경제성 판단의 다음 기준으로 삼고 있다. EU는 특히 생산원가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산요소에 대한 가격은 원가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반덤핑 마진의 산정에 기준이 되므로 시장기능에 의해 생산요소의 가격이 결정되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1.4. 무역환경

시장경제의 또 다른 전제조건은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막론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되는가의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하부구조가 구축되어 있는지, 관련 행정적·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무역과 관련된 기업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정부가 수출과 수출기업을 통제하고 있는지도 고려되고 있다.

1.5. 금융시장 여건

시장경제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서 금융시장 여건과 관련하여 이자율과 환율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가가 관건이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통화가

자유롭게 그 밖의 통화와 교환될 수 있는지, 기업 활동에 의해 창출된 수익을 아무런 제약 없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는 시장경제의 금융시장 여건 조성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2.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

2.1.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

WTO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의 허용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는 하지만 반덤핑과 상계관세 발동을 위한 조사는 다분히 자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더욱이 중국이 WTO 회원국들로부터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될 경우 반덤핑 조치가 더욱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발동될 수 있으므로 중국의 입장에서 비시장경제 지위에서의 탈피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단행된 경제의 개혁과 개방 조치에 따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체제 전환조치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은 1950년 공산국가인 폴란드에 적용되었던 비시장경제 국가에 관한 조항(GATT 1994, 부속서 6 조 1항)을 현재의 중국에 적용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측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시장경제 국가의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UNCTAD's Glossary of Customs Term)¹.

중국의 상무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한 한 연구(A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China's Market Economy 2003, by Beijing Normal University; www.china.org.cn)

¹ UNCTAD의 비시장경제의 정의 : 국가의 생산목표, 상품의 가격, 생산원가, 투자의 결정, 노동 등 생산요소 배분, 무역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여 일체의 경제활동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공 부문이 국가경제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를 뜻함.

에서는 국제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미 69%가 시장경제에 의거 작동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통상적으로 60%를 초과하면 시장경제라 판단).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무역 상대국들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여 중국산 상품에 대해 반덤핑조치의 남발을 통해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비시장경제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은 이미 중국을 부분적으로 일부 분야에 대해 신축적으로 시장경제 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들의 전례를 중국을 포괄적인 방식에 따라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하는 국가들(미국 등)에게도 따를 것을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이다. 둘째, 러시아와 베트남에서와 같이 중국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시장경제 여부를 판정받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중국이 시장경제의 6가지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고 체도를 개혁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WTO 규정의 개정협상을 통해 반덤핑 관련 비시장경제국가의 조항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시장개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국가도 WTO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게는 현재와 같은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2.2. 중국의 개혁 조치와 비시장경제 지위

중국은 1978년 농민들에 대한 개인 인센티브에 의한 농업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장개혁을 시작한 이후 20년 이상 전반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제도개혁에 노력해 왔다. 중국은 우선 정부가 중앙계획에 의한 시장개입을 축소하여 생산과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였다. 이후 중국 정부의 기능은 거시적인 변수의 통제나 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만 국한되도록 노력하였다. 1994년에는 세제와 금융, 외환, 투자와 관련된 개혁 조치가 있었던 관계로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더욱 진전되었다. 이러한 결과 개인부문(non-state-owned enterprises)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54%에서 2001년 63%로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자본시장,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등이 개설 또는 활성화되어 생산요소의 가격이 더

육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로 옮겨 가고 있다.

최근 EU는 중국이 그들을 비시장경제국 분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거절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많고 관련 법 체제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가격의 90% 이상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 지향적인 방향으로 3,000개에 달하는 법과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2004년 6월; <http://www.eubusiness.com>).

최근 중국 상무부는 2005년 3월 말까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한 국가가 총 38개국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현재 확인된 국가는 뉴질랜드, 러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총 28개국이다. 이들 국가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사유는 중국과의 FTA 체결, 전통적인 우호 관계 유지, 원자재와 식량 등 대중 수출 급증, 외교전략 등이었다.

표 2-1.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국가와 사유

	인정국가	인정사유
대양주	뉴질랜드	FTA
서아시아	파키스탄	전통적 우호관계(대인도 외교전략)
남미	칠레,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애티가바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칠레 · 대중 원자재, 식량수출 급증: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 외교적 고려: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가이아나, 나이지리아, 지부티, 베닌, 남아프리카공화국, 토고	제3세계로서의 전통적 우호 관계, 외교적 고려, 남아공의 경우 중국의 26대 수출국
CIS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그루지아	구 사회주의국가로서 시장경제지위 획득에 대한 공감대 및 전통적 우호관계
ASEAN 10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	중국과의 FTA 협상

중국과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볼 때, 5위까지의 교역국은 아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싱가포르(9위), 말레이시아(10위), 러시아(12위), 태국(16위), 인도네시아(20위) 등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국가 가운데 교역규모가 비교적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는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WTO 반덤핑협정문

3.1. 덤핑의 개념과 반덤핑 관세 부과와 법적 근거

덤핑이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normal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이가 덤핑마진이다. 덤핑행위는 일반적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을 왜곡함으로써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WTO 협정문(GATT 1994 6조)에서는 이를 불공정무역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덤핑관세는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특정 물품을 덤핑 수출함으로써 수입국 내의 동종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해당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관세이다. 따라서 반덤핑관세는 덤핑을 통한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될 때 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반덤핑관세는 기존의 세이프가드와는 성격이 다른 국내 산업 보호 조치이다. 반덤핑관세는 발생원인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무역행위, 즉 덤핑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세이프가드는 수출국이 국제 규범을 위배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내에서 수입이 급증하여 산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UR 협상에서는 기존의 반덤핑 관련조항(GATT 6조, 1947)에서 용어와 규정의 정확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여 반덤핑의 자의적인 판정과 조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반덤핑 관련 UR 협정문에서는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구성가격(constructed price)의 계산에서 비용의 분배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공정한 비교를 통해 덤핑마진을 자의적으로 확대 계산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하였다. 또한 협정문에서는 덤핑과 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서 관련되는 모든 요소를 감안하도록 하였다. 덤핑에 의해 피해를 입는 국내 산업(domestic industry)이란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생산량의 합계가 해당물품의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major proportion)을 차지하는 국내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협정문에서는 반덤핑 조치를 위한 조사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반덤핑 조치의 지속기간도 덤핑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지 않는 한 5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덤핑마진이 경미(de minimus)하거나(덤핑마진이 수출가격의 2% 이내인 경우) 덤핑에 의한 상품수입의 비중이 적을 경우(덤핑에 의한 상품수입이 관련 상품의 총수입의 3% 미만일 경우) 덤핑조사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 또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즉시 반덤핑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3.2. 덤핑마진의 산출과 비시장경제 국가

WTO 반덤핑협정문 제2조 2항에서는 덤핑마진의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출국 국내시장의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나 실질적인 국내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출가격과의 비교가 적절치 않을 경우 제3국의 수출가격 또는 원산국에서의 구성가격을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격과 비교되는 수출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국에서 최초로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제2조 3항).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2조 4항).

WTO 반덤핑협정문은 비시장경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정상가격은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라 볼 수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출할 수 없는 점을 인정, 비시장경제국가의 가격특성을 고려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GATT 1994 부속서 1의 제6조 1항에 대한 제2의 보충규정에서는 ‘완전히 혹은 거의 실질적으로 거래가 정부에 의해 독점되고 국내가격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가격비교에 특별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이 인정되며, 그러한 경우 수입국은 그러한 국가에서의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항상 적정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² 이에 근거하여 미국, EU, 캐나다 등 대다수 WTO 회원국들은 그동안 중국을 비시장경제 국가로 간주하고, 중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의 생산원가나 가격자료를 기초로 삼지 않고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인접한 제3국의 생산원가나 가격을 정상가격의 산정에 원용하여 왔다. 또 다른 경우 반덤핑 조치 국가들은 생산원가와 가격을 자의적으로 합성하여 도출한 정상가격 자료를 반덤핑 판정의 기초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실 시장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의 경우에도 정상가격의 계산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국 국가들은 WTO의 적법한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앞서의 오류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수입국들의 반덤핑 마진의 산정이 더욱 자의적일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반덤핑 조치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경우 최근 시장경제원리가 폭넓게 도입되어 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

² 이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It is recognized that, in the case of imports from a country which has a complete or substantially complete monopoly of its trade and where all domestic prices fixed by the State, special difficulties may exist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and in such cases importing contracting parties may find it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at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 in such a country may not always be appropriate’

결정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제3의 대체국을 찾기도 수월한 것이 아닌 관계로 중국을 무조건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주요국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규제

4.1. 미국

미국(구체적으로 상무성 산하 수입관리과: Department of Commerce, Import Administration)의 경우 그 밖의 국가들과는 달리 반덤핑의 조사와 관련하여 중국을 비시장경제 국가로 취급하는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 이는 EU, 한국, 인도 등이 중국을 원칙적으로 비시장경제 국가로 간주하지만 일부 상품이나 조건하에서는 시장경제 국가로 취급하는 등 혼합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이 중국을 비시장경제 국가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제공된 가격과 생산원가 자료를 거부하고 제3국의 관련 자료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보조금의 경우 상계관세의 수준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의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을 비시장경제 국가로 취급, 반덤핑 조사를 할 경우 가공된 정상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과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국가의 생산요소 가격, 특히 임금수준을 회귀방정식 등을 통해 추정하고 있다. 실례로 2000년의 경우 소련의 평균임금은 1.52달러, 타지키스탄 0.62달러인데 비하여 중국은 0.80달러로 산정하여 반덤핑 조사의 기초로 사용한 바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가 많아 중국산 상품의 수입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반덤핑 관련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 미국 상무성의 수입관리청이 러시아와 베트남의 비시장경제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

미국의 수입관리청은 2002년 중반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의 여부에 대해 세계은행, OECD, IMF 등은 물론 러시아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러시아는 미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시장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러시아를 시장경제국가로 지정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정상적인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 규정의 대상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이 반덤핑 조사를 행할 경우 제3국의 자료 대신 러시아의 국내가격과 생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러시아의 시장경제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러시아 루블화의 그 밖의 통화로의 교환 가능성(currency convertibility),
- 2) 임금이 자유시장에서 임금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
- 3) 외국회사의 투자나 합작회사의 허용정도,
- 4) 생산수단의 중앙정부 소유와 통제 정도,
- 5) 자원 배분과 가격, 그리고 기업의 생산결정에 대한 정부의 통제 정도,
- 6) 기타 수입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인

미국의 수입관리청은 러시아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루블의 그 밖의 통화로의 교환을 일부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가 1996년 이미 IMF의 8조국으로 전환되어 전반적인 측면에서 통화의 교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러시아의 임금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시장임금 수준과는 별도로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기업의 경우 노사교섭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체적인 임금수준은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가 1992년 이후 외국 투자를 자유화시켰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기업 활동과 투자에 있어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러시아는 투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세제를 개혁하여 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는 것이다. 토지의 경우 토지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의 소유를 확대, 허용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사유화정책의 노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비시장경제 국가

에서 탈피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을 통해 전기, 원유와 가스 등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분야에서의 정부의 개입을 제한했으며, 1999년 은행에 대한 통제를 철폐하였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시장경제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부패와 직권남용(barter)의 정도를 미국 수입관리청은 조사했으나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베트남

미국 상무성의 수입관리청은 2002년 7~11월 기간 동안 러시아에 대한 평가 기준을 베트남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장경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와 달리 여전히 비시장경제 국가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은 베트남이 일부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시장개입이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의 왜곡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우선 베트남의 경우 동(dong)화의 교환이 제한받고 있으며 IMF 8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환율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결정에 있어서는 국영무역 기업의 경우에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임금 이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설정되는 등 상당한 신축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외국인 투자는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었으며 이익금의 환수와 송금에도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소유 생산수단의 사유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토지의 사유화 허용에 제약은 대단히 제약적이다. 자원 배분과 가격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거의 없어졌으나 은행에 대한 개입은 여전하여 금융부문에서는 시장 기능이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미국과의 양자협상과 WTO 가입협상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4.2. EU

EU의 경우 미국보다는 유연한 방식(hybrid approach)을 기초로 삼아 중국을

포함한 비시장경제 국가들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 위원회 결정(Commission Decision No 2277/96/ECSC)에 따라 비시장경제 국가와 관련된 반덤핑 조사의 정상가격은 제3의 시장경제국의 가격이나 산정된 가치(constructed value)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EU는 1998년 4월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의 명단에서 제외하고 특수경제국(special economy country)이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특수경제국은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의 중간단계에 있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EU가 그동안 중국의 개혁성과를 일부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 개정된 반덤핑 법(Commission Decision No 435/2001/ECSC)에서는 종전보다 신축적인 방식으로 비시장경제국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다. 즉, 반덤핑 조사 시점에서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비시장경제 국가가 WTO에 가입이 완료되었을 경우 EU는 이들 국가들을 해당 국가의 생산자들이 정상가격의 산정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할 경우 시장경제 국가로 간주하는 것으로 반덤핑 조사규정이 개정되었다. EU의 이와 같은 조치는 EU가 여전히 중국을 비시장경제 국가로 간주하지만 제한된 특정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4.3.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비시장경제 판정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시장경제성 여부보다는 기업과 산업적 측면에서의 시장경제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1)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
 - 가격결정에 대한 영향력, 국내 거래 및 국제 무역에 대한 통제
 - 생산계획에 대한 통제
- 2) 일반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 일반 기업에 대한 금융 통제
- 3) 국제무역과 관련한 외국 기업에 대한 제한

- 정부의 수출입가격 및 쿼터에 대한 통제
- 4) 기초 생산요소와 에너지의 가격, 임금 수준, 생산량 및 생산물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 시장경제로의 개혁노력
- 5) 기업 간의 이자율에 대한 차별성 유무
 - 시장환율의 여부 및 통화간의 교환 가능성

4.4. 인도

인도의 경우에도 EU와 같이 더욱 유연한 혼합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중국을 비시장경제 국가로 간주하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시장경제 국가에 기초한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5.1. 중국의 WTO 가입 배경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중국의 WTO 가입에 동의하고 중국은 국내 인준문서를 사무총장에 기탁함으로써 동년 12월 WTO의 14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1986년 GATT에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어 작업반(Working Party)이 구성되어 8년간 중국의 가입 여부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15년 동안 그들의 무역체제와 변화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업반에 제공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관심 WTO 회원국들과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화 계획에 관한 양자협상을 진행시켰다. 양자협상과 더불어 중국은 가입작업반을 중심으로 중국의 무역규정에 대한 다자협상을 병행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양자, 다자 협상의 결과는 중국의 가입의정서에 구현되어 있다.

5.2.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의 내용과 의미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제반의 무역장벽을 완화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상품의 수출입과 국내 판매에 대한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의 기업과 영업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 개입의 축소로 인하여 특히 정부기업의 의사결정 관련 자율권이 크게 신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 담겨 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중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5.2.1. 전반적 내용

중국은 1986년 WTO 가입신청 이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경제체제의 개혁작업을 수행해 왔지만 WTO 가입 이후에도 연속적인 개혁작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정서에서 약속하였다. 약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경제활동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제 개혁
- 2) 최단 시일 내에 기존 20여 개의 WTO 다자협정의 의무 준수
- 3) 전 분야에 걸친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 4) 제조상품 및 농산물의 실질적인 관세 인하
- 5) 중국의 시장개방과 개혁 작업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 다자기구의 설치, 연도별 운영

5.2.2. 체제 개혁 약속

가. 투명성 제고

중국은 각종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과 규정을 WTO의 개념과 용어에 부합하도록 개정 또는 수정할 것을 약속하였다. 약속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은 공식적인 발간 자료를 통해 관련 개혁의 내용과 자료와 규정개정의 발효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외국 기업의 문의

에 30일 이내에 답하기 위해 공식적인 접촉창구(enquiry point)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한편 중국은 수입상품의 국내 유통, 수송, 판매 등과 관련된 규제와 제한 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내에 독립적인 사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도 약속하였다.

나. WTO 다자협정의 준수

중국은 WTO의 무차별원칙, 내국민 대우 등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무역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기존의 농업 관련 WTO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생산과 무역의 왜곡효과를 초래하는 국내 보조금의 수준을 개도국보다 낮은 수준인 8.5%에서 제한하기로 하였다. 품목별로는 옥수수, 소맥, 감귤류와 육류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곡물류와 대두유, 면화 등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TRQ)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맥, 쌀, 옥수수 등의 수입을 독점해 왔던 국영무역 제도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곡물, 육류, 과일류 등에 대한 동식물검역을 과학을 기초로 삼아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기술적 장벽(TBT)과 관련하여 중국은 수입상품을 차별 없이 각종 부과금(fees), 제조기간, 고충처리기간 등의 문제에서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하였다.

5.2.3. 보조금(Subsidies)

중국은 WTO 가입 이후 WTO 보조금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국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보조 등 무역 왜곡적인 산업정책의 완화 내지 철폐에 관한 양허를 하였다. 또한 특정 회원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위해 보조금 수준을 산정할 경우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그 밖의 시장기능 기준이나 제3국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중국이 반덤핑 조치와 관련 비시장경제로 간주된 것과 유사한 차별적인 대우이다.

5.2.4. 국영무역과 국영기업

중국은 국영기업에 의한 수입독점을 철폐하면서 국영무역 기업의 가격설정 메커니즘에 관한 완벽한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무역 왜곡의 방지를 위해 수입부과금(mark-up)의 수준을 제한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국은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과 관련한 구매, 생산과 공급 등에 있어서 WTO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즉 국영기업은 상업적 고려를 기초로 삼아 가격, 생산량을 결정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국영기업의 이러한 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5.2.5. 가격통제

중국은 가입의정서 부속서에서 일부 가격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통제 내역 및 가격설정의 지침과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향후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량을 제한하기 위해 가격통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5.2.6. 시장개방

중국은 제조업 상품에 대한 관세를 1997년 평균 25%에서 7%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농산물의 관세는 2004년까지 22%에서 17%로 감축해야 한다.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 감축은 중국이 미국, EU, 일본, 한국 등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이 결과들이 가입협상의 과정에서 다자화되었다. 중국이 WTO 가입대가로 양허한 농산물시장 개방의 주요골격은 우선 비관세장벽이 적용되었던 분야(과일, 육류, 유제품, 음료 등)를 관세화하는 것이었다. 관세화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TRQ)을 설정하여 수출국에게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설정된 쿼터 물량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 품목별로 일정한 비율로 배정하며, 국영무역에서 쿼터 물량 수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이해 당사국과의 양자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합의된 주요 내용은 미국의 관심품목인 쇠고기, 오렌지, 포도, 포도주, 유제품, 아몬드 등의 평균관세율은 31%수준에서 14.5%까지 더 큰 폭으로 인하하며, 관세 감축기간은 UR 협상 시의 개도국 대우원칙을 원용하여 2004년까지 이행하도록 하였다. 쇠고기는 현행 45%의 관세율을 2004년까지 12%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돼지고기와 가금육에 대한 관세율은 20%에서 12%와 10%로 각각 인하한다. 과일류 가운데 감귤과 포도의 관세율은 40%에서 12%와 13%로 각각 인하되며, 사과와 아몬드는 30%에서 10%로 인하된다(표 2-2). 쌀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226만 톤에서부터 2004년까지 532만 톤으로 확대하고 쿼터의 절반은 중단립종으로 수입하며 이 중 민간에 의한 수입물량을 50%에서 유지하고, 시장접근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1%,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7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표 2-2. 미-중 간 주요 품목의 관세율 합의내역

단위 : %

품 목		현 재	2004년
육류	쇠고기	45	12
	돼지고기	20	12
	가금류	20	10
대 두		3% 단일세율로 양허	
과일류	감귤	40	12
	포도	40	13
	사과	30	10
	아몬드	30	10
포도주		65	20
유제품	치즈	50	12
	아이스크림	45	19

자료: 미 농무부 ERS(2000)

표 2-3. 미-중 간 주요 품목의 시장접근물량 합의 내역

품 목	초기 쿼터(만톤)	최종 쿼터(만톤)	민간 비중(%)	98년 수입(만톤)
대두유	170	330	50% ⇒ 90%	170
밀	730	930	10%	200
옥수수	450	720	25% ⇒ 40%	25
쌀	260	530	50%	25
면 화	74.3	89.4	67%	20

자료: 미국 농무부 ERS(2000)

한편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한 검역에 의한 수입장벽과 수출보조의 철폐에도 합의하였으며, 특히 미국산 밀, 감귤류, 육류에 대한 비과학적인 검역 조치를 완화하고, 중국산 옥수수, 면화, 쌀, 차, 닭고기 등에 대한 수출보조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EU·중국간의 양자협상 과정에서는 EU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버터, 분유, 감귤류, 올리브, 파스타 등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EU와 중국 간에 체결된 동식물 검역 관련 양자협정을 WTO 동식물검역협정(SPS)으로 대체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표 2-4. EU-중 간 주요 품목의 관세율 합의내역

단위: %

품 목	현행세율	합의세율	품 목	현행세율	합의세율
버 터	30	10	분 유	25	10
감귤류	40	12	파스타	25	15
올리브	25	10	밀가루	30	18

자료: 해외산업경제 44호, 국가정보원(2000. 5)

또한 일본은 1994년 5월부터 중국과 양국 간 협상을 실시, 1997년 7월 하시모토(橋本) 전총리의 방중 시에 상품(관세, 비관세, 기준인증)에 대하여, 1999

년 7월 오부찌(小淵)총리의 방중 시에 서비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은 농산물과 관련하여 과실류(배, 사과), 수산물(태평양연어, 진주 등), 일부 가공농산물(조미료) 등 중국으로 수출 가능성이 있는 농림수산물 등 12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요구하여, 중국으로부터 이들 품목의 평균관세율을 18.8%으로 인하한다는 데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현행 이들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중국의 기본관세율 기준으로는 62.5%, 실행관세율 기준으로는 48.5% 가량의 인하에 해당된다. 외에도 일본은 야채·차·닭고기 등에 대한 수출보조페지를 요구하여 중국 측으로부터 이러한 품목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폐지를 약속받았다.

표 2-5. 중-일간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 합의내용

단위: %

품 목	기준세율	현행세율(1996년)	합의세율
채소류			
마늘	50	22	20
생강	40	35	20
조제품	50	45	25
과실			
사과	80	40	26
배	80	40	26
밀감	80	52	26
축산물			
닭고기	50	45	20
가공품			
조미료	70	35	28
간장	70	35	28
임산물			
합판 등	20	20	12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경제국 국제기획과(1999)

한국과의 양자협상에서 중국은 36개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추잉껌, 라면, 인삼주 등 가공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허관세가 실행 적용관세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 양자 합의에 따라 라면의 양허관세를 60%에서 30%로 인하하였으나 현행 실행관세는 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분야에 대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국이 가공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조정관세부과 등 피해구제 대책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중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양파, 마늘, 당근 등 1차 농산물의 관세는 실행관세 수준으로의 인하를 약속하였다.

5.2.7. 기타

중국은 제반 양허사항에 관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WTO 차원의 과도기적인 이행점검기구를 8년간 운영하고 10년차에는 최종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에 합의하였다. 이는 중국이 이행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회원국들의 질문과 이의 제기에 답하고 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WTO의 14개 하부위원회에서의 양허를 준수해야 하며, 이행결과를 일반이사회에 보고하고 일반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전반적인 점검과 이행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상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여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타 일반 회원국들과의 분쟁해결의 경우와 동일하다.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는 기존 회원국들에게 중국에 대해 특별 긴급구제조치(Safeguard Mechanism)를 허용한 것이다. 즉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중국산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회원국들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와는 별도로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는 중국 측에게 수출자율규제(VER)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에 대한 특별 긴급구제조치의 발동수준은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낮아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중국에게만 고유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12년간 발동할 수 있다.

표 2-6. 한·중 농산물 관세 인하 협상 결과

품 목	현행 (%)	합의 (%)	품 목	현행 (%)	합의 (%)
새의 깃털	80	10	추잉껌	40	15
쪽파	50	30	캔디	40	15
양배추, 배추	50	30	국수	60	30
당근	50	30	라면	60	30
냉동양파 및 마늘	50	30	곡물조제용 조제품	60	30
채소류 혼합물	50	30	베이커리 제품	60	30
일시저장 양파	50	30	오이·양파·토마토 조제품	50	30
일시저장 오이	50	30	김치	50	25
일시저장 마늘	50	30	인스턴트 커피	100	65
건양파	60	30	배양 효모	60	25
건마늘	60	50	간장	70	30
초분류 딸기	60	50	된장, 혼합조미료	70	30
인삼분말	70	50	혼합조미료	70	35
인삼정 및 정분	60	20	단백질 농축물	70	35
글리세린	40	20	커피프리머	70	65
소세지	70	30	설탕, 감미료 첨가물	80	65
조제저장용 파 및 설육	70	30	맥주	120	65
자당	60	65	소주, 인삼주	150	65

자료: 농림부 국제협력과

한편 중국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을 15년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여 비시장경제국에 적합한 방식으로 덤핑의 수준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중국의 특수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수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 것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국가 규모가 방대하여 세계 농산물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국가의 시장개입 정도가 높고 다양한 분야에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다.

제 3 장

중국의 농정개혁과 농촌시장경제 발전

1. 최근 중국의 농업·농촌 시장경제개혁 추진 상황

1.1. 토지제도 건설

1.1.1. 토지시장의 지속적 확대

2002년은 중국의 토지자원이 시장에 의하여 분배되도록 하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해이다. 전국의 1,258개 시(현)에 토지수매보유제도(土地收購儲備機制)를 수립하고, 1,198개 시(현)에 토지시장을 건설하였다. 또한 각 직할시, 성도 등의 기준지가에 대한 갱신작업을 완성하였다. 2003년 1~9월까지 전국에서 경매·양도된 국유토지의 면적은 27,454.31ha이고, 양도금액은 1,376.13억 위안이며 양도 총면적과 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0.16%와 55.21%로 2002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토지시장의 이 같은 발전은 국유토지의 시장교역을 확대하고 토지자산의 시장가치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토지시장에 대한 거시조정 능력의 제고와 토지자산 관리제도의 정비를 통해 공개, 공평, 공정한 토지시장을 형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1.1.2. 토지시장제도 건설의 점진적 추진

2002년 5월 9일, 중국 국토자원부는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경매·공시 양도에 관한 규정(招標拍賣挂牌出讓國有土地使用權規定)》(2002년 7월 1일 발효)을 통과시켰는데, 이 규정은 입찰·경매·공시방식으로 양도된 다양한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입찰·경매·공시 양도의 절차를 규정짓고,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예를 들면, “상업, 여행, 오락 및 상품 주택 등 각 종류의 경영성 용지는 반드시 입찰공고, 경매 혹은 공시방식으로 양도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동일토지에 두 종류 이상의 목적을 가진 토지 사용자도 반드시 입찰공고, 경매 혹은 공시방식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양도방식은 경영성토지사용권의 양도에서 중지되고, 시장이 경영성 토지사용권을 배분함으로써 시장으로 하여금 지가를 확정짓게 하였다.

2003년 6월 11일, 국토자원부는 또한 《국유토지사용권의 협의양도 규정(協議出讓國有土地使用權規定)》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협의양도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협의양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양도는 반드시 양도 계획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토지 사용자를 선발하고, 집단적으로 지가를 결정하며 협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였다. 협의방식으로 양도된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액은 국가 규정에 따라 확정된 최저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공표·실시는 시장의 토지자원 재배치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 거래의 공개, 공정, 공평한 토지시장의 정상적 질서유지를 확보하며 시장규범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은 각 지역 토지시장 규범의 각종 제도 체계상의 큰 발전 이룬 해였다. 30개성(구, 시)은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공고, 경매, 공시 양도제도를 수립하였고, 28개성(구, 시)에는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공고, 경매, 공시 양도 관리방법을 제정하였으며, 23개성(구, 시)에는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양도의 위법 및 위배행위에 대한 당 및 행정 처분규정(黨紀政紀處分規定)이 내려졌다.

국토자원부 및 각 지역에서 제정한 각종 중요한 법규는 국유토지사용권 관리 체계를 더욱 완비하였으며 토지시장 운영질서를 규범화하였다. 현재 각 지역의 토지수매비축(土地收購儲備), 토지유형시장(土地有形市場), 토지입찰 경매공시거래(土地招標拍賣挂牌交易)작업은 이미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었다.

최근 2년간 국유토지유상사용제도(國有土地有償使用制度)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경영성 토지 사용권 입찰, 경매, 양도공시제도의 시험적 실시와 동시에 국유토지 사용권 가격의 시장 체계를 형성하여 토지시장 건설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1.2. 국내 무역(國內貿易)

1.2.1. 관리체제의 중대 변화

무역 분야의 심사허가제도 개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2002년에는 46개의 행정심사허가항목을 삭제하였는데, 여기에는 외자를 이용한 자본 증자(增資)에 대한 심사, 상업 및 물자기업에 대한 수출입 경영권을 부여하고, 노동 항목의 심사허가 및 각종 상품생산 경영의 심사허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국내외 무역의 관리 부문 및 그 직능을 합병하여 상무부(商務部)를 설립하였다. 상무부는 그 설립 초기에 《시장개척과 내수확대를 위한 지도의견(做好当前開拓市場擴大內需工作的指導意見)》을 제정하여 상품유통체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대리경영, 특허경영 등 다양한 유통방식과 조직형식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2001년 4월 국무부는 《시장경제활동 중의 지역봉쇄 금지에 관한 규정(關於禁止在市場經濟活動中實行地區封鎖的規定)》을 제정하여 업계의 독점, 부분 분할 및 지역봉쇄의 타파와 화물유통 방해 행위 및 분할할 때에장의 지방주의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1.2.2. 국내시장 개방 확대

중국은 WTO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시장진입을 확대

하고 외국 기업의 도소매 및 특허경영 서비스 합자기업 설립을 인가하여 연초 및 그 제조품, 식염, 도서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박막, 화학비료 등 상품의 수입과 도매·소매업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 특히 대규모 다국적기업이 중국 국내시장에 대규모로 진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프랑스의 까르푸(CARREFOUR), 歐尙(GROUPEAUCHAN), 일본의 吉之島(JUSCO) 기업, 영국의 百安居(그 모기업은 KINGFISHER) 기업 및 중국, 대만지역의 통일집단(統一集團), 홍콩 특구의 화운집단(華潤集團) 등 거대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내국민 대우에 따라 이들 경영자에게 양호한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기업들은 중국이 WTO 가입하기 전에 이미 중국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신속히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미 중서부시장 진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2.3. 각 무역주체는 시장규칙에 따라 운영

2002년 이래 중국 정부는 중소유통산업 개방을 확대해 오고 있다. 다양한 정책으로 국유 및 집체중소유통기업으로 하여금 개혁, 구조개편 및 구조조정 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2002년 이래, 식량판매 시장화 개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식량수매와 가격이 전면 개방되었다. 면화유통체제개혁은 社企분리, 공급판매사의 경영자주권 제고, 면화 수매와 가격개방, 면화 종자 수매에서 다양한 루트의 경쟁 체제가 형성되었다.

1.2.4. 시장경제규칙에 따른 가격관리체제 개선

2002년 1월 1일부터 《가격왜곡행위금지규정(禁止價格欺詐行爲的規定)》 《정부가격제정행위규칙(政府制定價格行爲規則)》(시범시행), 《중요 상품과 서비스 가격비용의 감독 심사 임시시행방법(重要商品和服務價格成本監審暫行辦法)》 등을 발효시켰다. 이 같은 행정법규는 정부가 가격 주관 부문 혹은 기타 유관 부문이 정부지도가, 정부정가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제정 혹은 조정할 때 행정성 독단과 간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수리신청, 조사, 논증 혹은 심사, 결정과 중요상품 원가심사 행위 등 공무활동을 규정짓고, 정부 가격결정의 과학성을 제고시킨다.

특히 중국 정부는 《정부가가격정책결정 증언청취 임시방법(政府價格決策听証暫行辦法)》을 개정하여 가격증언청취제도(價格听証制度)를 완비하였다. 2003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 《가격 독점 행위 제지 임시규정(制止價格壟斷行為暫行規定)》은 가격독점행위 방지, 공정경쟁 촉진,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2002년 이래, 중국의 국내무역의 시장화는 큰 진전을 이룩하였는데, 이는 국내시장 개방 부문은 물론 체제개혁과 가격제도 부문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1.3. 대외 무역(對外貿易)

1.3.1. 시장개방 정도의 지속적인 제고

시장 규모의 확대는 개방 수준의 제고를 촉진하고, 세계 각국과 각 지역 무역파트너에게 거대한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2년과 2003년 중국의 실제 수입 규모는 8천억 달러에 이르고, 2003년 중국의 수입 규모는 이미 미국, 독일에 이은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 중국 농업의 발전 수준을 살펴보면, 2002년 중국 수입 농산물은 135억 달러로 2001년에 비해 13.1% 증가하였다. 2003년 1~9월까지 농산물 무역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124.4억 달러를 수입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76.3% 증가하였다.

미국국제경제연구소(美國國際經濟研究所) 연구원인 니콜라스 라디(尼古拉斯 拉迪)는 “2003년 중국의 수입액은 전년보다 40% 증가하였는데 연간 무역 수입 증가액은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이는 중국의 시장개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모든 신흥시장경제국 중 중국은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3.2. 관세의 대폭 감축, 비관세조치의 점진적 철폐

2002년과 2003년에 중국은 상품무역 분야에서 대폭적인 관세 철폐와 점진적인 비관세조치 폐지를 단행하였다. 2002년 1월 1일 5,300개 상품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여 관세 총수준이 15.3%에서 12%로 낮아져 감소 폭이 21.6%에 달한다. 그 중 공업품의 평균관세율은 14.7%에서 11.3%로 감소하였고, 농산물(수산물 제외)의 평균관세율은 18.8%에서 15.8%로 낮아져 관련 세목수는 총 세목수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잠정세율 신상품 역시 기존의 523종에서 209종으로 감소하였다. 2003년 관세 산술 평균세율이 11%까지 감소하였는데 인하폭이 8.3%에 이른다. 농산물(수산물 제외)의 평균관세율은 이미 16.8%까지 인하되었으며, 이러한 수준은 세계 농산물 평균관세 62%의 수준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10.3%로 떨어졌고 동시에 천여 개 화공품 세목의 2/3가 화공품 협조관세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소수의 WTO 회원국만 이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관세율을 한층 더 인하하였다. 중국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稅則)》을 비준하였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관세 총수준을 11%에서 10.4%로 조정하였다. 또한 비관세조치를 철폐하였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식량, 양모, 면화, 아크릴섬유, 테릴렌, 화학비료, 부분타이어 등 8종 상품의 쿼터, 허가증 및 특정입찰관리를 폐지하였다. 2003년부터 중국은 모든 농산물의 비관세조치를 철폐하였고, 또한 일부 오토바이 및 관련부품, 자동차 및 관련부품, 사진기, 시계 등 상품의 쿼터, 허가증 및 특정입찰관리를 폐지했다. 이전에 실시한 통일 연합경영의 쌀 등 5대 농산물과 5대 공산품은 대부분 WTO 규범에 따라 국영무역관리체제로 전환하였다.

1.3.3. 서비스무역의 대외 개방 법규 제정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중요한 일부 서비스무역 분야 외국자본의 중국 진입 심사 허가에 대한 법규 및 조례를 제정하였다. 통상 분야의 《외국변호사 사무소의 재중 대표기구 관리조례》,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임시방법》, 통신 서비스 분야의 《전신투자 외국 기업 관리 규정》, 소매 분야의 《중외 합작 은행 및 영상제품 소매기업관리방법》, 《중외합작 대외무역기업 설립에 관한 임시방법》, 운수 서비스 분야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실시세칙》, 《선박 분야 투자 외국 기업 심사허가관리임시방법》, 《민용 항공업 분야 투자 외국 기업 규정》, 《도로 운수 분야의 대외 개방에 관한 통지》, 《철도화물운수업 분야 투자 외국 기업의 심사허가 및 관리에 관한 임시방법》, 《국제화물운수 분야 투자외국기업 관리방법》이 있다.

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2002년 전후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專利法)》,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실시방법》 등 법규를 개정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집성전로배치 설계보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 등 행정법규를 제정하였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입법에 있어 기본적으로 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요구에 부합한다. 2002년과 2003년에 통상 서비스, 통신 서비스, 건축 서비스, 소매 서비스, 금융 서비스, 여행 서비스, 교통 서비스 등 대중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이행하였다.

1.3.4. 대외무역 경영주체의 다원화

중국의 대외무역 경영권은 법에 의거 등기제(登記制)를 이행하며 대외무역 경영권을 보유한 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경영주체의 다원화가 형성되고 있다. 대외무역경영권을 보유한 내자기업(內資企業)이 1989년의 6000개에서 2002년 6만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외국 투자기업은 동기간 1만여 개에서 20여만 개로 급증하였다. 2002년 말, 집계 및 민영기업 수출이 전국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나타났으며, 2003년 1~9월, 국유기업, 외국 투자기업, 집계사영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11.8%, 38.9%, 79.3%였다.

대외무역 주체의 다원화가 더욱 확산되어 외국 투자기업의 수출 증가량은 전국 증가량의 62%를 차지하고, 집체사영기업의 수출 증가량은 전국 증가량의 23.8%를 차지하였다. 2003년에는 전국에 새로 설립된 외국 투자기업이 41,081개로 전년도 동기 대비 20.22% 증가하였으며, 2003년 말까지 전국에서 설립 허가를 받은 외국 투자기업은 465,277개로 늘어났다.

2003년 10월 11일, 중공16차3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완비하기 위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을 통과시켜 일차로 비공유제기업이 용자, 세수, 토지 사용 및 대외무역 등 분야에서 공유제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결정하였는데, 이는 무역주체의 다원화 추진을 위한 동력이 되고 있다.

1.3.5. 대외무역 관리 투명도 제고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투명도 양허에 따라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WTO 에 가입한 날로부터 중국세계무역조직통보자문국(中國世界貿易組織通報諮詢局)이 정식 업무를 개시하였다. 2002년 1월 1일, 중국세계무역조직통보자문국은 대외경제무역부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정부 세계무역조직통보자문 방법(中國政府世貿組織通報諮詢辦法)》(임시)와 《중국정부 세계무역조직통보자문국 자문방법 등기표(中國政府世貿組織通報諮詢辦法登記表)》를 발표하여 무역 관련 자문 범위, 방식 및 시한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1월 14일, 상무부, 기타 부처 및 관련 연구기구의 WTO 전문가와 학자로 구성된 중국 정부 세계무역조직통보자문국은 각국의 주중 대사관, 외국 기업과 개인에게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상무부는 WTO 자문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수출입무역관리조치(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貿易管理措施)》(2003)를 완성하였다.

2003년 11월 26일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외무역법(수정초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 질서 보호,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WTO 가입 후 2년 동안 중국은 시장경제를 기준으

로 대외무역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대외 개방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시장경제 법제건설

2002년과 2003년의 법제건설은 한편으로는 구법률, 법규 및 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제정하였다. 2002년, 국무원은 30개 부문의 2300개의 법규를 정리하여 그 중 830개를 폐지하고, 325개를 개정하였다. 또한 19만개의 지방법규, 지방정부 규칙과 기타 정책을 철폐 혹은 개정하였다. 중앙 일급의 대외경제 및 무역 법률 법규의 정리작업은 2002년 6월에 완성됨에 따라 시장경제수요에 부합하고 WTO의 법규에 따르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무역법률제도가 기본적으로 구비되었다.

1.4.1. 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규정

재산권 보호 분야의 주요 법률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농촌토지도급법(中華人民共和國農村土地承包法)》과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中華人民共和國知識產權海關保護條例)》가 있다. 《농촌토지도급법》에는 농민의 토지도급권익, 유통매매권익(流轉權利), 수익권익 및 보상권익이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농촌토지도급법》은 국가가 실시한 농촌토지도급경영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도급경영권을 침해한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가정승포(가정도급)로 획득한 토지도급경영권은 법률에 따라 임대, 교환, 양도 혹은 기타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는데, 유통은 반드시 평등협상, 자원, 유상의 원칙에 따라 하되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도급경영권 유통을 강제 혹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에서는 국가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의 수출입 금지를 규정하였다.

이 외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은 2003년 4월 17일에 《유명상표인정과 보호규정(馳名商標認定和保護規定)》을 개정, 공포하여 2003년 6월 1일부터 발효시켰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유명상표

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규정을 철폐하였고, 유명상표의 심사절차를 증가시켰다.

1.4.2. 정부행위 제약 규정

중국의 정부행위 제한 관련 가장 중요한 법률은 《정부구매법(政府採購法)》과 《행정허가법(行政許可法)》이다. 2002년 6월 2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정부구매법》을 통과시킴으로써 2003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였다. 정부구매법은 정부구매는 반드시 순환원칙, 공개투명원칙, 공평경쟁원칙, 공정원칙과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관리직능과 구매직능을 명확히 하여 한편으로는 정부구매가 시장규칙과 법률 제약, 교역행위 평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구매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정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관리직능 및 구매직능 상호 분리의 관리 기제를 형성하는 데 있다.

2003년 8월 27일, 제10차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을 통과시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허가(통상적으로 “행정심판”으로 일컬음)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 경제 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사전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본 법률은 행정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유권설정 행정허가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질서를 간소화하고, 행정허가사항의 감독검사를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행정심사허가범위를 축소하고, 행정심사허가 질서를 간소화하며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 공개, 투명 등 현대법제원칙을 관철시키고, 정부관리와 시장기제 분업의 현대이념을 관철하는 데 있으며, 아울러 공평하게 개별 시장주체의 행정허가평등원칙을 관철하는데 있다.

《행정허가법》과 2000년 이전에 제정된 《행정처벌법(行政處罰法)》, 《행정재의법(行政復議法)》,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및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은 각급 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의 법에 의거한 행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법규의 제정과 집행은 행정심사허가제도 개혁의 성과를 공

고히 하고, 중국의 대외 양허의 이행과 국민과 법인 및 기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행정관리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원칙적으로 부패를 근절시키며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감독하고 보장한다.

14.3. 상품무역 분야의 새로운 규정

상품무역 관련 주요 법률에는 《수출입상품검사법》과 《수출입관세조례》가 있다. 2002년 4월 28일에 《수출입상품검사법》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 ‘기술적 무역장벽협정’의 요구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검사 목표는 인류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환경보호, 사기행위 방지, 국가안보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규칙에 따르고, 투명도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둘째, 수출입 상품에 대해 검사권리가 있는 기구에 대해 기존 규정한 “국가상품검사(國家商檢) 부문, 상품검사기구가 지정한 검사기구”에서 “상품검사기구 및 국가 상품검사 부문의 허가를 거친 검사기구”로 수정하여 일정한 절차와 조건에 부합한 상품검사기구는 상품 수출입 검사에 종사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수출입 상품 검사의 내용은 수출입상품이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확정하고, 기존의 상품 규격과 수량 등 검사 규정을 삭제하였다.

넷째, 수출입 상품의 근거 분야에서는 《기술적 무역장벽 협의》중의 합의에 따라 “기술규범”과 “표준”을 사용한다.

2003년 11월 23일 새 수출입관세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시켰다. 조례는 수입관세 세율의 설치, 국별 적용 원칙 등의 내용에 대해 정의와 표현을 새로이 규정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평가 방법의 선택권 등 약간의 권익부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관세세율항목을 적절하게 조정하였고, 규범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투명도를 제고시켰다. 그리고 WTO 가입 후의 권익을 이용해 관

세를 수단으로 한 각종 무역구제조치를 완비하였다. 이러한 관세조례의 제정은 중국의 WTO 가입 양허 이행과 수출입관세 징수 및 납부행위를 규범 짓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4.4. 외국 기업(外商) 투자 분야의 새로운 규정

외국 기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2002년에 새로 발표된 주요 법률로는 《외국기업 투자방향 지도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과 《외국기업 투자산업 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이 있다. 국무원은 2002년 2월 11일 새로 《외국기업 투자방향 지도규정》을 개정 발표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규정》의 부속 규정으로서 국가계획위원회(현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등 부문이 국무원 비준을 거쳐 2002년 3월 11일 공동 발표한 《외국기업 투자산업 지도목록》과 《규정》이 동시 시행되었다.

《외국기업 투자방향 지도 규정》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중서부지역에 대한 우대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중서부지역 외국 기업투자 우위산업 목록》을 특별히 제정하였다. 둘째, 《외국기업 투자산업 지도목록》과 《중서부지역 외국 기업 투자 우위산업 목록》은 외국 기업의 투자항목에 대한 심사허가를 지도하고 외국 투자기업의 관련 정책 적용의 근거가 된다. 셋째, 외국 투자기업의 투자유도 및 제한 분야에 대해 수정을 가하였다. 넷째, 외국 투자기업의 투자유도 항목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우대 외에 투자액이 크고, 회수기간이 긴 에너지, 교통, 도시기초시설건설,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비준을 거쳐 그 경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기업 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외국 투자기업의 개방정도를 명확히 확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투자 유치계열을 186개조에서 262개로 확대하였고, 투자제한종류를 112개에서 75개로 축소하였다. 둘째, 외국 기업의 투자주식비율제한을 완화하였다. 셋째, 새로운 투자영역을 개방하여 기존 외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였던 전신과 가스, 열력, 배수 등 분야를 대외 개방영역으로 전환하였다. 넷째, 은행, 보험, 상업, 무역, 여행, 전신, 운수, 회계, 회계감사, 법률 등 서비스 분야를 더욱 확대하였다. 다섯째, 외국 기업의

서부지역투자를 유치하고, 서부지역 투자 외국 기업의 주식비율과 업무제한을 완화하였다. 여섯째, 시장기제의 작용을 발휘하여 일반 공업상품을 허가계열로 편입시켜 경쟁을 통해 산업 및 상품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촉진시켰다.

이 밖에 중국에 대한 외국 투자자나 외국 기업이 투자 운영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외국기업이 투자 운영하는 투자기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14.5. 반불공정경쟁 및 반독점 관련 법률의 설명

중국은 현재 일부 특정의 반독점법이 존재하며, 이 법률은 주로 다음과 같은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반불공정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에는 반독점규범이 있으며, 이 법규는 6종의 불공정경쟁행위와 5종의 독점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둘째, 관련 법률규정의 반독점행위가 있다. 《가격법》규정의 불공정경쟁행위에서 시장가격 교란행위, 저가덤핑행위 및 가격차별행위와 같은 3종의 독점행위가 명시되어 있다. 《입찰법(招標投標法)》은 관련 조항 중 상세히 규정된 입찰행위 외에 입찰자의 차별대우 및 기타 입찰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지방 법률 규정의 반독점행위. 현재 이미 입법권을 지닌 20여 개의 지방입법기관이 《반불공정경쟁법》의 시행조례 혹은 시행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지방 법률은 《반불공정경쟁법》규정을 구체화 한 것 외에 보충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시장의 카르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규정이 체계적이진 않으나 중국의 반독점규범이 이미 틀을 갖추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2.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농촌시장경제 발전

2.1. 농촌시장경제 발전 개황

2.1.1. 종합

2002년 개최된 중국 공산당은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會: 중산층 사회)’건설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도·농 이원화 구조의 변화, 도시와 농촌 발전의 총괄, 현대화 농업 건설, 농촌 경제 발전, 농민 소득 증대를 중대 임무로 삼았으며, 이는 곧 새로운 시대를 맞는 중국 농업 및 농촌 발전의 지도방침과 행동강령이 되었다.

제16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 구현과 농촌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일련의 정책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정책들의 실시는 중국의 농촌시장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1.2. 부문별 내용

1) 농촌의 토지제도 건설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중국의 토지거래는 시장화와 법제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로써 기본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개된 토지시장 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토지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체계가 정비되었다. 2002년 8월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第九屆全國人大常委會) 제29차 회의에서 《농촌토지도급법(中華人民共和國農村土地承包法)》을 통과시키고, 2003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 법은 토지도급경영권의 보호를 명확히 하고 있어서, 도급기간 내에 도급을 맡긴 자가 도급한 토지를 회수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급을 맡긴 자와 도급자간의 권리와 의무, 도급원칙과 질서, 도급기한과 계약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도급경영권의 유전(流轉), 기타 방식의 도급, 분쟁 해결과 법률 책임 등도 규정하고

있다. 2003년에는 토지와 사회보장혜택을 교환하는 업무를 추진하여 토지징용보상분배를 규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농촌토지도급정책 및 법률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토지도급기간 30년 불변 업무가 규범화되었고,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유전과 발전이 안정화되었으며, 토지도급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02년 6월 말 중국 농촌은 토지도급기간 30년 불변의 업무를 완성하여, 각 농가의 도급지와 도급면적을 규정하였고, 토지도급기간이 30년 이상인 촌(村)은 가정도급경영(家庭承包經營)을 실시하는 촌의 93.5%를 차지하였다.

2) 농산물 유통체제의 개혁

중국은 2001년 전국 면화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주요 식량 판매지역인 8개성(직할시)과 식량 생산·판매균형지역인 4개성(자치구, 직할시)이 식량구매·판매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해서 식량유통체제개혁을 심화하였고, 안후이성(安徽省)과 지린성(吉林省)에서 식량재배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보조금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2003년 말 전국 18개성은 식량수매시장과 수매가격을 모두 개방하였고, 4개성은 보호가격의 수매범위와 가격을 조정하였다. 2003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차 삼중전회(三中全會) 및 그 후 발표된 몇몇 중요문서에서는 2004년에 식량수매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식량유통체제개혁을 실시할 것을 지적하였다. 총체적인 개혁 이념은 식량구매·판매시장의 개방, 식량 재배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보조금정책 실시, 식량시장 질서 유지, 국가의 거시적 조절정책 강화였다. 2004년부터는 담배수매시장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농산물의 구매·판매시장을 모두 개방하고 시장화 운영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3) 농촌신용사(農村信用社)의 개혁

2003년 7월 2일 국무원(國務院)은 농촌신용사(농촌금융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의 재산권 제도, 관리 체제, 리스크 범위 등의 관련문제에 대해 《농촌신용사의 개혁 심화를 위한 시범방안(深化農村信用社改革試點方案)》을 발표하

였다. 2003년 8월 국무원은 저장(浙江), 산둥(山東), 장시(江西), 구이저우(貴州), 지린(吉林), 충칭(重慶), 산시(陝西), 장쑤(江蘇) 등 8개 성시(省市)에 대해 우선적으로 농촌신용사 시범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시범개혁의 총체적인 방안은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규제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적절한 국가지원을 실시하며, 지방정부가 개혁을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국무원이 비준한 8개성(시)의 농촌신용사 시범개혁실시방안을 살펴보면, 모두 국무원 15호 문서의 요구에 따라 농촌신용사 시범개혁방안의 중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관리체제, 재산권 제도, 정책 지원 및 경영 메커니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였다. 관리 체제의 개혁에 있어서, 8개성시의 실시방안은 모두 성급(省級)정부가 관할지역내 농촌신용사의 관리와 리스크를 책임질 것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업무조치를 제시하였다. 이미 성급 연합사(聯社)를 설립한 충칭과 장쑤를 제외한 나머지 6개성의 정부는 성급 연사를 해당 성의 농촌신용사를 관리하는 매개체로 삼아, 성의 연합사 설립을 통해 현지 농촌신용사가 자율적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였다.

재산권 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8개성(시)의 실시방안은 “과학적 합리성, 소속의 투명성,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 보호의 엄격성, 유전(流轉)의 자율성”라는 요구에 따라서 농촌신용사의 재산권 제도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였다. 제도 선택에 있어서, 각 지역의 구체적 특성에 맞게 적절한 정책을 취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지역마다 주식제, 주식합작제 및 지속적으로 규범을 정비하는 합작제 등 다양한 제도형식을 선택하고 결합시키며, 적극 주주권 구조의 다양화와 투자 주체의 다원화를 추진하여, 대대적으로 각 경제주체와 일반인의 주식참여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농촌신용사의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미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다.

4) WTO 가입과 중국의 농업정책조정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정식으로 WTO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WTO의 관련 규정과 가입 이행 약속에 의거 전면적인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농산물의 관세쿼터 관리,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위생 강화, 국내지지정책의 조정과 농업 법률 및 법규 개정 등 농업정책에 일련의 조정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WTO 무역정책의 심의 및 보고 활동, 신규 회원국 가입협상, WTO 뉴라운드협상, WTO 어업보조금 삭감에 관한 협상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 규정한 수출 관련 쿼터 및 기타제한조치를 살펴보면, 수출쿼터허가증관리대상품목은 옥수수, 쌀, 소맥, 면화, 차, 누에고치 등이고, 수출쿼터입찰대상품목은 골풀(등심초) 및 골풀 제품 등이다. 옥수수, 쌀, 면화, 누에고치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고, 차에 대해서는 지정경영관리를 실시한다.

5) 농촌의 법제건설

입법 분야에 있어서, 2002년 8월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는 《농촌토지도급법(中華人民共和國農村土地承包法)》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2월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는 개정한 《농업법(中華人民共和國農業法)》과 《초원법(中華人民共和國草原法)》을 통과시켰으며, 이 세 법률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2년 농업부(農業部)는 16개 부문규정을 발표하였고, 지방에서는 79개의 농업 부문 지방법규와 정부규정을 공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2003년 6월 국무원은 《어업선박검사조례(中華人民共和國漁業船舶檢驗條例)》를 발표하였고, 2003년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농업부는 《원양어업관리규정(遠洋漁業管理規定)》 등 6개 규정을 제정하였고, 《사료첨가제와 첨가제혼합사료 생산허가증 관리 규정(飼料添加劑和添加劑預混合飼料生產許可證管理辦法)》을 개정하였다.

2.2. 농촌시장화의 구체 내용

2.2.1. 2002년 이후 농촌시장경제주체의 시장화 발전

가. 향진(鄉鎮)기업

2002년 한 해 동안 향진기업은 31,800억 위안(元)의 수익을 거두었고, 전년 대비 8.3%성장하였는데, 이는 전국 GDP의 31%를 차지하고, 전국 공업수익의 46.1%를 차지하였다. 2002년 향진기업의 주요 성장근원은 개체기업과 사영기업이 빠르게 발전한 반면 집체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또 집체기업이 향진기업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의 32.1%에서 30%로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2003년 향진기업은 36,686억 위안의 수익을 거두었고 전년 대비 13.3%성장하였는데, 그 중 집체기업은 11,434억 위안의 수익을 거두었고 전년 대비 6.8%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개체·사영기업은 17,928억 위안의 수익을 거두었고 전년 대비 24.2%증가하였다. 공사제(公司制) 등의 혼합형기업은 4,518억 위안의 수익을 거두었고, 전년 대비 37.4%증가하였다(농업부, 2004). 1급 행정촌(行政村)의 경우, 농가가정과 개체·사영기업의 주체로서의 지위는 더욱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다(표 3-1). 향진기업의 조직형식에서 재산권주체는 이미 다원화되고 있으며, 전체 향진기업 중에서 공사제는 7.3%를 차지하고, 동업체(合伙制)는 4.73%를 차지하며, 개인독립자본(個人獨資)은 87.97%를 차지하였다.

나. 농가가정

2002년 이후에도 농가가정경영은 여전히 농업 생산 및 경영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토지경영의 경우,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집체경영토지는 2002년과 2003년 모두 5%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농가가정경영의 경작지는 각각 전체 경작지의 96.68%와 94.69%를 차지하였다. 경영 총수입의 경우, 2002년 집체경영수입은 총수입의 15.87%를 차지한데 반해,

농가경영수입은 전체 수입의 41.65%를 차지하였다. 경영비용의 경우, 농가가 정의 경영비용은 전체 경영비용의 38.5%를 차지하였으나, 집체경영의 경우에는 전체 경영비용의 16.3%에 불과하였다. 국가납부세금의 경우, 농가에서 납부한 세금이 집체가 납부한 것의 3.22배에 달했다.

표 3-1. 2001-2003년 1급 행정촌의 종합생산경영상황

지표	단위	2001	2002	2003
1. 조사 대상 촌(村)	개	304	316	314
2. 촌의 연말 기업체수	개	9.98	9.91	9.2
- 집체기업	개	0.15	0.95	0.6(0.4)*
- 주식제와 주식합작제 기업	개	0.27	0.19	0.2
- 동업기업	개	0.73	0.76	0.7
- 사영기업	개	6.09	6.70	5.8
- 기타기업	개	1.86	1.33	1.9
3. 경작지 면적	ha	204.95	176.91	178.9
- 집체통일경영	ha	2.6	3.75	7.3
- 농가가정경영	ha	199.46	171.04	169.4
- 공동도급경영	ha	0.38	0.52	0.6
- 기타경영	ha	2.45	1.61	1.2
4. 전체 경영수입	백위안(百元)	221,991	270,545	
- 집체경영수입	백위안(百元)	39,356	42,947	
- 농가가정경영수입	백위안(百元)	91,922	112,643	
5. 전체 경영비용	백위안(百元)	170,653	197,410	
- 집체경영비용	백위안(百元)	28,934	32,200	
- 농가가정경영비용	백위안(百元)	65,813	75,988	
6. 국가납부세금	백위안(百元)	4,447	5,793	
- 집체기업납부세금	백위안(百元)	533	695	
- 농가가정납부세금	백위안(百元)	1,924	2,239	

주: 괄호속의 수효는 집체기업중에서 개인도급이나 공동도급을 하는 기업수를 가리킨다.
 자료: 農業部 《중국농업발전보고(中國農業發展報告)》 2002, 2003, 2004년.

2.2.2. 농촌경제의 화폐화와 다양화

가. 농촌경제의 화폐화

2002년 이후 농촌경제의 화폐화가 계속 향상되었다(표 3-2). 현금 순수입이 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의 73.86%에서 2003년의 81.43%로 증가하였고, 실물 순수입은 2001년의 26.13%에서 2003년의 18.57%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현금지출이 가정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의 82.12%에서 2003년의 83.86%로 증가하였다.

표 3-2. 현금수지가 가정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위안

연도	농가가정의 1인당 순수입(위안)	현금 순수입의 비중(%)	실물 순수입의 비중(%)	농가가정의 1인당 총지출	현금지출의 비중(%)
2001	2,366	73.87	26.13	2,780	82.12
2002	2,476	76.74	23.26	2,924	83.37
2003	2,622	81.43	18.57	3,025	83.86

자료: 《中國農村住戶調查年鑑2002(중국농촌가구조사연감2002)》, 中國統計出版社, 2003년, 《農村經濟綠皮書(농촌경제녹서)》(2003, 2004년), 社會科學文獻出版社.

나. 농촌경제의 다양화

2002년 이후 농촌경제의 다양화는 농촌의 1차산업이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 2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2003년에 1차산업이 농촌의 업종별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3-3. 농촌의 업종별 수익 구성

단위: %

연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2001	32.8	51.9	15.3
2002	30.5	52.9	16.6
2003	28.0	54.9	17.1

자료: 《農村經濟綠皮書(농촌경제녹서)》(2004년);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년 6월.

농촌경제 발전의 다양화는 농민 수입, 즉 농민 수입원의 다양성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 중 가장 뚜렷한 변화는 농민 수입원에서 임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으로서, 2003년 농민의 순수입 가운데 임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5.03%에 달했는데, 이는 2001년보다 2.6%포인트 증가한 것이고, 농민 수입 증가분의 54.11%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표 3-4. 농민의 수입원 구성

단위: 위안/인, %

연도	순수입	임금수입	비율	가정경영 순수입	비율	재산수입	비율	이전수입	비율
2001	2,366.4	771.9	32.62	1,459.63	61.68	46.97	1.99	87.9	3.71
2002	2,476	840	33.93	1,487	59.97	51.9	2.1	99.04	4.0
2003	2,622	939	35.03	1,540	58.74	65.81	2.51	96.75	3.69

자료: 國家統計局農調隊(국가통계국농업조사팀): 《中國農村住戶調查年鑑2002(중국농촌 가구조사연감2002)》, 中國統計出版社, 《農村經濟綠皮書(농촌경제녹서)》(2003, 2004년),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2.3. 농산물 시장

2002년과 2003년에도 농산물 유통부문의 시장화 개혁은 계속 추진되었다. 면화수매·판매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후 면화수매경로의 다양화가 추진되었는데, 2003년 말 전국 면화수매가공기업은 기존의 3,000여 개에서 7,600여 개

로 증가하였고, 비공소사(非供銷社) 면화기업의 수매량이 사회수매량의 60% 이상에 달했으며, 비농촌발전은행(非農村發展銀行)의 자금으로 수매한 면화가 당시 수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20%포인트 증가하였다.

식량의 구매 및 판매도 시장화 범위를 확대하였다. 2003년 말,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저장, 푸젠(福建), 장쑤 등 18개 성은 식량수매 시장과 수매가격을 모두 개방하였고, 안후이,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지린, 내이멍구(內蒙古),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장시, 장쑤 등의 성(省)들은 성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식량 재배 농민에 대해 직접지불보조금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단지 랴오닝(遼寧), 신장(新疆), 닝샤(寧夏) 등의 성(省)에서만 수매가격보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2004년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는 식량수매시장과 수매가격을 모두 개방하였다. 이로써 2004년부터는 전체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담배와 계획수매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은 시장과 가격을 개방하였다.

대부분의 식량수매시장과 수매가격이 개방된 것 이외에 전통적인 식량유통 분야의 주체인 국유식량기업도 시장화 개혁을 단행하였고, 몇 년간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국유식량기업의 개혁도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과 기업의 분리를 통해 기업이 시장경영의 주체로 자리 매김

2003년 말, 국가식량국(國家糧食局)과 중국식량비축총공사(中國糧食儲備總公司)는 정경분리 방침에 입각하여 정부의 행정관리와 기업의 경영활동의 분리에 착수하였다. 각 성, 시, 현의 식량주관부서들도 기존의 직속기업들과 분리되어 기본적으로 정경분리를 실현하였고, 국유식량기업도 시장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2) 대대적인 국유식량기업의 개혁을 통해 기업개편과 구조조정 단행

2003년 말 전국의 국유식량기업은 39,495개로 1998년 말의 53,240개보다

25.8%감소하였고, 국유식량유통(구매 및 판매)기업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일부 기업을 폐지, 합병, 매각, 임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3년 말 전국의 국유식량유통기업은 22,345개로 1998년 말의 30,434개보다 26.6%감소하였다. 국유식량기업의 수매량은 2001년의 11,783만 톤에서 2003년의 9,718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유식량기업은 적극 재산권 제도를 개혁하였는데, 그 결과 2003년 말까지 전체 국유식량기업의 32.4%에 해당하는 12,799개가 개혁을 단행하였다.

3) 잉여직원의 분산재배치로 직원의 사회보장체계 구축

2003년 말 전국 국유식량기업의 직원은 205.1만 명으로 1998년 말의 330.6만 명보다 125.5만 명 감소하였고, 감소 폭은 38%였다. 그 중 국유식량유통기업의 직원은 127.8만 명으로 1998년 말의 194.8만 명보다 67만 명이 감소하였고, 감소 폭은 34.4%였다.

2.2.4. 농촌의 생산요소시장

가. 노동력 시장

2002년과 2003년에 많은 도시들이 농민공(農民工; 농촌 호구를 지닌 도시임시노동자)의 도시 내 취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폐지하면서 농민공들의 도시 진출을 통한 취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노동력의 전이(轉移)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농촌의 유출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3년 농촌에서 도시로 전이된 노동력은 16,950만 명으로, 이는 전체 농촌노동력의 34.9%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하였다. 그 중 가족과 함께 전이한 노동력은 2,430만 명으로, 이 노동력의 61%가 대도시로 진출하였고, 49.9%는 성 범위에서 전이되었다. 유출 노동력의 월평균 수입은 전년 대비 7.8%증가하였다. 노동력의 외부 유출은 대부분 시장화를 통해 실현된 것이며, 정부 조직의 유출 노동력은 전체 유출 노동력의 3.3%만을 차지하였다(국가통계국, 2004).

표 3-5. 2003년 행정촌 노동력의 유출 노동력 취업상황

지표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조사 대상 촌(村)	개	304	316	314
○ 연말 노동력	개	886.21	882.35	942.3
○ 유출 노동력	개	159.5	174.34	201.8
- 출향(出鄉)(현내) 취업자수	개	56.29	60.72	69.5
- 출현(出縣)(성내) 취업자수	개	49.16	49.31	58.9
- 출성(出省)(국내) 취업자수	개	48.43	60.69	71.2
- 역외 취업자수	개	0.97	2.09	2.2
○ 유휴 노동력	개	78.42	78.59	83.6

자료: 《中國農業發展報告》(2002, 2003, 2004년).

2002년과 2003년의 농촌노동력 외부 유출에는 수적 증가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났다. 첫째, 농민공의 일자리가 더욱 안정화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갖고 있는 농민공은 이미 전체 농민공의 54%를 차지하였다. 둘째, 직업훈련 등을 통해 농민공의 자질이 크게 향상되어 그들의 취업도 3D업종에 국한되지 않았다. 셋째,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농민공이 ‘망리우(亡流; 부랑자)’, ‘민공차오(民工潮; 농한기를 맞아 도시로 돈 벌러 오는 농촌지역의 계절 노동자 물결)’ 등 사회 불안 요소로 여겼으나, 현재는 사회 전체가 농민공을 산업노동자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이징에서의 농민공에 대한 호칭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이전의 ‘외래노동자(外來務工人員)’라는 호칭이 ‘상경노동자(來京務工人員)’로 바뀌었다. 넷째, 국가의 농촌노동력에 대한 취업정책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농민공을 막고, 억류하고, 제한하고 각종 증서관리비를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농민공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강조하고, 이전의 과도한 비용징수 업무와 증명카드 관리 등을 청산하였다. 이로써 농민공의 취업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다섯째, 농민노동력의 합법적 권리가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전에는 도시로 유입된 농

민공의 노동 강도가 세고, 업무환경과 생활 여건이 열악하며, 임금체불도 빈번하게 발생했었지만, 현재는 국가에서 농민공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농민공의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농민공이 유입된 지역의 정부가 이들의 자녀취학문제, 산재보험 및 각종 보험 가입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함을 골자로 하는 명문규정을 제정하였다. 여섯째, 정부는 농민공의 자질 향상 문제를 의정활동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농업부 등 몇몇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햇볕공정(陽光工程)”에는 이미 5,000만위안의 자금이 투입되어 250만 명의 농민공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 농촌의 토지시장

중국은 도·농 이원화구조 때문에 토지시장에서도 도·농 이원화의 토지소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농촌에서는 토지집체소유제를 실시하고 있고, 도시에서는 토지국가소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농촌의 토지시장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농촌토지사용권의 유통(流轉)이고, 둘째는 농촌토지소유권의 유통이다.

농촌토지경영권의 유전은 주로 촌의 집체와 농가, 농가와 농가, 농가와 기업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촌 토지 유전의 주요 형식에는 전환, 임대, 주식매입, 상호교환이 있으며, 수치상으로는 농가 간의 자발적인 전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중개조직을 구성하여 토지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3월 말 절강성의 토지유통 중개조직은 3,069개에 달했다. 최근 몇 년간 농촌의 토지유통은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다. 2002년 6월 말 절강성의 토지유통면적은 절강성 전체 경작지의 19%를 차지하였고, 2001년 3월 말보다 65%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농가는 절강성 전체 농가의 20%를 차지하였고, 2001년 3월 말보다 54.6%증가하였다.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토지유통면적은 헤이룽장성 전체 경작지의 7.3%를 차지하였고, 이와 관련된 농가는 헤이룽장성 전체 농가의 14%를 차지하였다(통계국 농업조사팀(統計局農調隊), 2004). 토지유통을 통해 첫째, 토지사용권의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절강성의 1무(畝)당 토

지 임대료는 200위안이상이고, 최고 임대료는 이미 1,000위안을 넘어섰다(절강성 농업조사팀, 2004). 둘째, 토지경영규모를 확대하였다. 지아성화(賈生華) 등이 2003년 강소, 절강, 산둥의 3개성 5개현(시, 구) 83개 농업경영농가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농가의 평균 경영 규모는 93.23무였고, 그 중 임대 경작지는 51.55무에 달했다. 이러한 임대토지의 임대기한은 집체임대가 보통 10~30년이고, 농가임대는 1~3년이였다.

농촌토지소유권의 유통은 주로 농촌토지의 비농업적 사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주로 농지전용(轉用)의 통일징용관리제도(統一徵用管理制度)를 실시해 왔다. 즉 촌의 집체소유토지를 행정수단을 통해 징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징용제도는 시장화되지 않은 토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토지징용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토지징용에 대한 보상이 불안정하며, 토지징용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는 등의 폐단을 가지고 있다. 현재 토지의 자산가치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도시의 교외지역에는 은폐성 토지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즉 농촌의 집체토지가 양도, 불하, 임대, 저당, 토지 사용권의 주식매입, 연합경영, 합병, 교환 등의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유전되는 수량과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은폐성 토지시장은 시장경제의 내재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3) 농촌의 자금시장

농촌자금의 시장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농촌의 고정자산 형성 과정에서 기업, 농가 등 농촌경영단위의 투자가 주체가 되었다. 둘째, 전체 자금 투자 중에서 신용대출자금이 주체가 되었다. 셋째, 신용대출자금 중에서 농촌의 민간대출규모가 정식대출규모와 상응하게 되었다. 넷째, 신용대출자금중에서 금리의 시장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2003년 농촌의 고정자산투자액은 9,754.9억 위안이었는데, 그 중 기업의 고정자산투자액은 5,108.4억 위안으로 52.37%를 차지하였고, 농가의 고정자산투자액은 3201.0억 위안으로 32.81%를 차지하였으며, 이 두 비율을 합산하면 85.18%가 된다. 그 중 기업단위는 주로 2차산업에 투자하였는데, 제조업에 대

한 투자는 전체 투자의 74.94%를 차지하였다. 농가는 주로 농업과 주택업에 투자하였는데, 농업 분야에는 746.5억 위안을 투자하고 부동산업에는 1,788.1억 위안을 투자하였으며, 이 두 투자액을 합산한 금액은 농가 투자에서 79.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3-6).

표 3-6. 2003년 농촌의 고정자산 투자 상황

단위: 억 위안

	전국 합계	기업단위	사업단위	농가
농촌고정자산투자액	9,754.9	5,108.4	1,445.5	3,201.0
- 농업	1,117.3	181.3	189.5	746.5
- 제조업	3,945.6	3,828.7	51.4	65.5
- 부동산업	2,038.1	139.3	110.8	1,788.1

자료: 《中國農村統計年鑑(중국농촌통계연감)》(2004)中國統計出版社. 2004년.

표3-6을 보면, 농촌의 시장경제주체인 기업과 농가는 생산과 경영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농촌의 투자 주체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하에서는 투자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어 있다. 표 3-7은 농촌고정자산의 귀속에서도 농촌의 자금시장에서 농촌의 투자주체는 주로 시장화된 경영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7. 2001-2002년 행정촌의 생산성 고정자산의 귀속

단위: %

지표 명칭	2001년	2002년
생산성 고정자산	100	100
집체소유	24.16	20.39
농가소유	35.52	40.95
주식제기업소유	9.99	10.10
동업기업소유	1.61	1.81
사영기업소유	13.38	14.17
기타소유	15.33	12.61

자료: 《中國農業發展報告》(2002, 2003년)

투자자금의 속성을 살펴보면, 신용대출자금은 고정자산투자의 주요 자금원이 된다. 2002년 전국 농촌의 고정자산투자액은 8,011억 위안이었는데, 그 중 재정지원을 통한 농촌 생산 지출과 각종 농업사업비는 1,088.4억 위안으로 13.6%를 차지하였고, 외국 기업의 농업·임업·목축업·어업에 대한 실제직접투자액은 1,027,764만 달러로 약 10.6%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주요 투자자금은 민간자금과 신용대출자금이었다. 2002년 한 해 동안 향진기업의 새로운 투자 중에서 민영투자는 55%, 외국인 직접투자는 11%, 그리고 은행대출은 16%를 차지하였다.

농촌의 신용대출시장에서 민간대출규모는 대략 정규기관의 신용대출규모에 상응한다. 중앙재경대학 연구팀(中央財經大學課題隊)이 전국 20개성의 지하금융상황에 대해 현지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의 중소기업 중에서 약 1/3의 용자는 비정규금융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지하금융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았다. 서부 6개성의 중소기업 중에서 43.18%의 용자는 지하금융대출에 의해 이루어졌고, 중부의 39.8%의 용자와 동부의 최저 33.99%의 용자가 지하금융대출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민간대출의 발전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악성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게다가 정규금융기관의 금리시장화(자율화)도 큰 진전이 있었다. 현재 농촌 신용사는 농촌금융시장의 가장 주요한 기관이다.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의 규정에 따르면, 농촌신용사의 신용대출금리는 기준대출금리의 1.0~2.0배의 범위 내에서 변동가능하며, 한 시범개혁지역의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30% 상향 변동할 수 있다.

(5) 정부의 농업에 대한 보조금과 지지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도·농경제와 사회발전의 총괄”을 제시한 이후, 중국 정부는 2002년과 2003년에 중앙재정의 농업에 대한 투자가 줄곧 감소하고 심지어는 농업의 세후 순투자수익이 마이너스인 국면을 전환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 시작하였다.

표 3-8. 국가재정의 농업에 대한 지출구조

단위: 억 위안

연도	합계	농업 생산지출과 농림수리·기상 등 부서의 사업비 지원	농업의 기본건설 지출	농업의 3개 과학기술비용	기타	농업지출에 대한 투자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1	1456.7	918.0	480.8	10.3	47.7	7.7
2002	1580.8	1,102.7	423.8	9.9	44.4	7.2
2003	1754.5	1,134.9	527.4	12.4	79.8	7.2

주: “기타”는 주로 농촌구제금이다.

자료: 《中國農村統計年鑑2004(중국농촌통계연감2004)》, 中國統計出版社, 2004년.

중국의 농업에 대한 재정지출은 WTO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농촌지역의 생산 여건개선과 자원보호에 사용되었으며 다음 세 분야에서 잘 나타나 있다. 첫째는 “6소공정(六小工程)”이다. 이는 중앙재정투자로 농촌의 사회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절수관개시설, 식수 및 가축용수시설, 향촌도로, 농촌의 매탄가스설비, 수력발전시설, 목초지의 울타리 등 소규모 인프라시설을 포함한다. 2003년 농촌의 “6소공정”에 대한 중앙재정 투자액은 275억 위안에 달했는데, 2001년보다 약 1.8배 증가하였고, 2002년보다는 1배 증가하였다. 둘째, 퇴경환림(退耕還林; 경작지를 삼림으로 환원한다)에 대한 보조금은 76억 위안 증가하였다. 셋째, 농촌세비(稅費)개혁의 전환투자는 305억 위안에 달했다.

2.2.5. 농촌중개조직의 발전

가. 산업화 경영조직의 지속적 발전

2003년 전국의 각종 농업산업화경영조직은 9.4만개에 달했는데, 2000년의 6.67만개보다 2.73만개 증가하였고, 이에 소속된 농가는 7,265만호(戶)로 전국 농가의 30.5%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도보다 5%포인트 증가하였다. 산업화경

영을 통해 1개 농가당 평균수익은 1,000위안에 달했고, 2000년도 대비 100위안 증가하였다(농업부 2004).

나. 산업화조직과 농가 간의 관계 더욱 규범화 및 안정화

산업화경영조직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선두기업주도형이 4.2만개로 전체 경영조직의 44.4%를 차지하였고, 중개조직주도형이 3.2만개로 34.5%를 차지하였으며, 전문시장주도형이 9,163개로 9.7%를 차지하였고, 기타유형이 1.1만개로 11.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산업화조직과 농가의 연계방식 중에서 계약방식이 51.9%를, 합작방식이 12.6%를, 주식합작방식이 13.3%를, 그리고 기타방식이 22.2%를 각각 차지하였다.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연계방식인 계약, 합작, 주식합작방식의 비율은 전체 연계방식의 77.8%를 차지하였다.

다. 농민전문협동조직의 규범화 시작

2003년 말 중국의 농민전문협동경제조직은 15만개를 넘어섰는데, 그 중 재배업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전문협동조직은 전체 전문협동조직의 40%를 차지하였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27%를 차지하였으며, 가공운수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18%를 차지하였고,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15%를 차지하였다. 전문협동조직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과수 및 채소업, 목축업, 수산업, 임업에서 농기계 서비스, 운송, 식량유지작물, 수리건설, 자원개발, 수공업 생산 등으로 발전하였다. 농민전문협동경제조직의 발전을 위해 농업부는 《농민전문협동사 시범규정(시범실시)(農民專業合作社示範章程)(試行)》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2003년부터 일부 성(자치구, 직할시)의 농민전문협동조직 시범지역에서 이 규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몇몇 성(시)에서도 현지의 농민협동사시범규정을 제정하여, 전문협동조직의 규정 및 제도 마련을 지도하였고, 전문협동조직의 관리를 규범화하였다. 절강, 베이징, 강소, 산둥 등지에서도 농민협동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하여 농민의 조직화수준을 향상시켰다.

2.2.6. 농업 분야 시장경제 노력

이상 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도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WTO 가입이후 국제교역상에서 비시장국가라는 것이 국익 증대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으며, 이에 따라 시장경제국가의 지위 획득을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제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대외적으로는 교역대상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한 관계 개선에 전력을 쏟고 있다. 최근의 정책개혁의 핵심은 정부가 그간 식량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던 수매를 통한 시장개입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완전 개방을 단행한 것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일본, 한국, 호주 등 국가로부터 시장경제 국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 4 장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한·중 농산물 무역의 추세와 문제점

1.1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추세

1.1.1. 유별, 품목별 농축산물 수입 추세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은 UR 농업협상 이후 최근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쇠고기를 중심으로 한 축산물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0%를 기록하여 농축산물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곡류와 서류 등 소득탄력성이 낮은 식량의 수입은 이 기간 중 정체이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며, 축산사료의 경우 대두보다는 콩깻묵을 수입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중국이 주 수입원인 채소의 경우 물량 기준으로 연평균 30%의 수입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양파와 고추의 2003 수입이 2002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수입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버섯류와 과실류로 각각 28%와 2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4-1. 우리나라의 부류별·품목별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톤, 백만불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축림산물	26,621	6,438	31,568	7,452	33,198	8,527	34,282	8,591	37,141	9,807	36,739	10,501	6.65	10.28
농산물	20,865	4,696	22,207	4,682	23,113	5,104	23,247	5,325	24,375	5,701	24,301	6,212	3.10	5.75
곡류	12,062	1,637	12,858	1,527	12,868	1,532	12,470	1,546	13,522	1,646	13,054	1,784	1.59	1.73
밀	4,696	663	4,189	533	3,329	470	3,629	530	3,863	543	3,769	612	-4.30	-1.59
옥수수	7,119	913	8,126	887	8,728	937	8,505	932	9,130	987	8,799	1,054	4.33	2.91
서류	496	81	265	71	344	72	499	82	216	60	303	63	-9.39	-4.90
감자	33	32	52	46	52	43	54	42	58	44	55	39	10.76	4.04
두류	1,453	393	1,495	331	1,557	353	1,429	316	1,566	348	1,604	435	2.00	2.05
대두	1,413	379	1,443	312	1,496	329	1,365	293	1,503	328	1,535	410	1.67	1.58
팥	18	6	20	8	27	12	29	12	24	7	29	13	10.01	16.72
채유종실	126	78	187	99	226	102	235	95	246	95	250	128	14.69	10.41
참깨	54	45	60	51	70	52	77	49	63	38	81	68	8.45	8.61
땅콩	18	16	28	24	30	23	29	21	33	22	35	23	14.22	7.53
과실류	231	194	353	286	460	349	485	353	535	419	640	506	22.61	21.14
오렌지	68	68	70	83	139	116	137	121	150	147	185	168	22.16	19.83
바나나	85	37	167	73	184	75	194	70	187	78	220	90	20.95	19.46
채소류	129	137	194	175	220	187	237	192	258	195	480	278	30.06	15.20
양파	7	3	12	5	6	2	6	1	1	1	78	18	61.96	43.10
마늘	35	15	37	15	10	9	23	15	27	15	34	14	-0.58	-1.37
고추	5	13	6	10	6	10	9	14	7	12	61	40	64.92	25.21
화훼류	3	13	2	17	3	19	3	20	3	22	3	22	0.00	11.10
버섯류	4	5	11	9	11	9	12	8	14	11	14	15	28.47	24.57
박류	2,767	400	2,772	335	2,770	364	3,135	459	3,160	449	3,021	471	1.77	3.32
축산물	341	726	653	1,245	772	1,678	705	1,466	902	1,948	883	2,115	20.96	23.84
쇠고기	100	268	197	505	263	795	208	555	358	946	363	1,177	29.41	34.44
돼지고기	56	142	131	226	145	259	105	181	131	216	129	195	18.16	6.55

주: 증감률은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하며, $A_t = A_0(1+r)^{t-1}$ 에서 r 을 나타내며, 1998년 평균 대비 2003년 평균 증가율임.

자료: 농림부 수출입통계

1.1.2. 국가별, 순위별 농축산물 수입 추이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한국 시장에 최대로 농축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영국 등의 순이다. 특기 사항으로는 2002년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였으나 2003년에는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2003년은 전년 대비 9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이 되었다.

표 4-2. 주요 국가별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국 별	1999	2000	2001	2002 (A)	2003 (B)	증감률 (B/A)	주요수입품목
농림축산물	7,420.7 (100.0)	8,450.2 (100.0)	8,462.8 (100.0)	9,584.3 (100.0)	12,465.6 (100.0)	30.1	
중 국	761.7 (10.3)	1,405.0 (16.6)	1,111.2 (13.1)	1,601.4 (16.7)	3,035.0 (24.3)	89.5	옥수수, 합판, 밀, 한약재
미 국	2,499.8 (33.7)	2,433.7 (28.8)	2,370.6 (28.0)	2,470.8 (25.8)	2,893.1 (23.2)	17.1	쇠고기, 대두, 밀, 옥수수
호 주	666.6 (9.0)	775.8 (9.2)	664.9 (7.9)	801.7 (8.4)	805.6 (6.5)	0.05	쇠고기, 밀, 사탕수수당, 원목
뉴질랜드	310.7 (4.2)	339.9 (4.0)	391.3 (4.6)	450.0 (4.7)	498.9 (4.0)	1.1	원목, 쇠고기, 치즈, 키위
브 라 질	215.5	218.2	417.7	442.8	479.5	0.8	옥수수, 콩깻묵, 오렌지, 제재목
인도네시아	383.7	383.1	356.1	408.5	426.8	0.4	합판, 제재목, 섬유관, 야자유
말레이시아	302.1	331.5	326.6	359.8	372.7	0.4	합판, 팜유, 제재목, 원목
일 본	165.8	218.5	207.3	202.7	364.3	79.7	권런, 로얄제리, 채소종자
태 국	117.4	175.6	225.3	196.5	330.3	68.1	닭고기, 당밀, 사탕수수당
영 국	146.7	244.9	265.4	384.8	321.3	△16.5	위스키, 권런, 사료첨가제
캐 나 다	171.4	245.7	209.0	231.7	285.0	23.0	쇠고기, 돈육, 침엽수원목
인 도	124.0	128.2	172.1	195.6	173.4	△11.3	콩깻묵, 채종박, 밀, 당밀
과테말라	57.6	22.8	148.8	104.9	65.0	△38.0	사탕수수당, 커피, 참깨
기 타	1,497.7 (20.2)	1,527.3 (18.1)	1,596.5 (18.9)	1,733.1 (18.1)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중국은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의 수출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재 등 기타 특용작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한국으로의 농축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일관성이 없고 매년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수입상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자체의 수급 불안정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최대 농산물 수출국의 하나로서 주요 수출 품목은 쇠고기, 대두, 밀, 옥수수 등 전통적인 품목으로서 최근 쇠고기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옥수수 등 곡물의 수출이 부진하여 전체적인 농축산물 수출액은 정체 상태에 있다. 쇠고기와 오렌지의 경우에는 1999년 대비 2002년 2배 이상 수출이 증가하였다.

호주의 대 한국 수출의 주요 품목은 쇠고기, 밀, 사탕수수, 원목 등으로서 한국의 쇠고기 수입확대에 따라 전체적인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대 한국 수출 역시 축산물과 일부 과일류의 수출 증가로 상당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1.1.3. 중국산 농산물 수입 추이

표 4-3. 대중국 농축임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률 (03/02)
수 출	국가전체	13,685	18,455	18,190	23,754	35,110	47.8
	농림축산물	90.2	117.6	108.7	129.9	166.1	27.9
	- 농산물	37.8	59.0	68.4	95.6	116.8	22.2
	- 축산물	3.1	3.1	3.8	3.1	3.3	6.5
	- 임산물	49.3	55.5	36.5	31.2	46.0	47.4
수 입	국가전체	8,867	12,799	13,303	17,400	21,909	25.9
	농림축산물	761.7	1,405.0	1,111.2	1,601.4	2,061.6	28.7
	- 농산물	551.6	1,152.0	846.1	1,265.8	1,725.5	36.3
	- 축산물	15.1	23.4	32.3	43.0	38.5	△ 10.5
	- 임산물	195.0	229.6	232.8	292.6	297.6	1.7
무역 수지	국가전체	4,818	5,656	4,887	6,354	13,201	-
	농림축산물	△ 671.5	△ 1,287.4	△ 1,002.5	△ 1,471.5	△ 1,895.5	-

자료: 유통정책국, 국제농업국(관세청 통관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2003년 132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표 4-3). 반면 농축임산물의 무역수지의 적자는 확대되어 동년 19억 달러에 달하였다. 한국과 중국 간의 농축임산물 무역의 대종은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임산물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대부분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국가 전체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농산물 시장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나 반덤핑 관세의 부과가 실현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축임산물을 유별,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4-4와 같다. 우선 농산물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옥수수를 포함한 곡물류로서 2003년에는 1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곡물류 수입액이 연도별로 편차가 심한 것은 중국의 옥수수 수출이 중국의 국내 수급의 변동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곡물류 수출에는 일관성이 없

표 4-4. 대중국 농산물 유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 류	359,804	191,559	703,203	361,453	721,940	1,045,494
두 류	10,602	19,129	25,195	28,226	30,638	37,056
과실류	9,357	11,251	19,694	24,187	29,075	30,360
채소류	60,609	72,086	77,403	92,041	95,740	165,861
화훼류	318	967	994	1,325	1,702	1,847
버섯류	4,940	8,344	8,707	7,613	9,929	9,731
인삼류	608	723	1,649	2,544	3,117	3,770
사 료	6,241	9,233	10,209	12,453	17,836	33,453
당 류	35	298	522	832	1,429	4,161
계	621,625	551,618	1,152,039	846,089	1,265,880	1,725,495

자료: www.kati.net

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수출의 절대금액이 큰 것은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등을 포함한 채소류이며, 두류, 당류, 과일류 등의 순으로 수출액이 크다. 특히 한국의 채소류와 화훼류, 사료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그 증가율이 매우 높아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표 4-5. 대중국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쌀	16,049	49,097	37,014	18,337	21,727	36,027
옥수수	337,206	135,624	659,926	298,960	635,570	907,900
대두	3,017	8,461	9,701	12,484	18,884	20,110
팥	6,229	8,266	12,481	12,669	7,723	12,303
사과	110	468	488	717	973	1,066
배	2,518	172	461	92	33	35
복숭아	1,920	1,166	1,472	2,310	2,161	713
당근	1,697	1,577	3,067	4,803	6,769	13,994
양파	430	1,454	1,761	1,846	1,086	9,645
파	4,881	4,458	4,820	6,108	5,501	6,200
마늘	15,435	15,294	9,106	15,514	15,419	14,597
고추	13,767	10,511	10,367	13,960	12,049	39,408
난초	272	886	650	1,075	1,391	1,362
카네이션	-	28	223	149	133	177
양송이	1,637	4,827	5,003	3,616	6,668	6,733
영지버섯	731	376	730	1,161	771	551
사료용근채류	1,444	2,769	2,766	109	848	5,457
짚	862	1,316	1,175	860	921	2,843
사료첨가제	2,238	2,952	3,118	5,603	5,336	4,861

자료: www.kati.net.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 추세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곡물류의 경우 쌀과 옥수수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옥수수의 수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인 반면 매년 그 액수가 크게 변동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내의 수급불안정에 따른 것이다. 쌀의 경우 국내 생산의 감소와 꾸준한 수요를 중국산의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사과, 배, 복숭아 수입의 절대금액은 적은 수준이며 수입의 변동 폭이 큰 편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중국산 과일류의 수입은 국내시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마늘의 수입은 2000년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예전의 수준을 다시 회복하였다. 고추는 2003년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양파의 경우 2003년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하였다. 화훼류 중 카네이션의 수입은 정체상태이나, 난초류의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버섯류 중 양송이의 수입은 괄목할만하게 증가하였다.

1.2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세

1.2.1. 농산물 무역의 추이와 전망

중국의 국가 전체적인 무역액은 수출입을 막론하고 1995~2003년에 연평균 10% 이상씩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총수입이 최근에 와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재 수입과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수출입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흑자는 199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8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다시 확대되었고, 2003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표 4-6. 중국의 농축산물 무역구조 변화

단위: 백만불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율(%)
수출								
국가전체(A)	148,770	182,697	194,931	249,212	266,661	325,642	438,473	12.76
농림축산물(B)	11,623	12,537	10,905	12,582	12,867	14,523	17,319	4.53
B/A(%)	7.81	6.86	5.59	5.05	4.83	4.46	3.95	
농림산물	9,225	10,230	9,037	10,496	10,836	12,672	15,383	5.85
축산물	2,397	2,307	1,867	2,086	2,031	1,851	1,936	-2.35
수입								
국가전체(C)	132,078	142,361	165,718	225,097	243,567	295,302	413,096	13.51
농림축산물(D)	8,952	6,945	6,159	8,221	8,420	8,746	13,653	4.80
D/C(%)	6.78	4.88	3.72	3.65	3.46	2.96	3.31	
농림산물	8,685	6,571	5,313	7,154	7,399	7,609	12,209	3.86
축산물	267	373	846	1,067	1,021	1,137	1,444	20.63
무역수지								
국가전체(E)	16,692	40,336	29,213	24,115	23,094	30,339	25,377	4.76
농림축산물(F)	2,671	5,592	4,745	4,361	4,447	5,777	3,666	3.58
E/F(%)	16.00	13.86	16.24	18.08	19.26	19.04	14.4	
농림산물	540	3,658	3,724	3,342	3,437	5,063	3,174	21.75
축산물	2,131	1,934	1,021	1,018	1,010	714	492	-15.03

주: 증감률은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하며, $A_t = A_0(1+r)^{t-1}$ 에서 r 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농림축산물의 수출은 동기간 중 완만하게 증가한 이후 거의 정체 상태로서 2003년 173억 달러 정도를 기록하였다. 농림축산물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8%에서 2003년 4.0% 이하로 감소하였는데, 동기간 중 농림축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농림산물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축산물 수출이 상당한 정도 감소한 데 원인이 있다. 한편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같은 기간 중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3년 137억불에 달했는데 매년 국내 수급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관계로 수출에 비해 변화가 큰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02년 대비 2003년 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농림산물 수입의 증가율은 거의 정체상태이나 축산물의 수입은 국내 소비 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림축산물의 무역수지는 축산물의 무역흑자가 상당한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물 교역에서 비중이 큰 농림산물의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관계로 농림축산물 총 무역흑자는 동기간 중 연평균 3.5% 이상씩 증가하였다(표 4-6).

1.2.2. 중국의 수출 농림축산물의 품목구성의 변화

중국의 총 농림축산물 수출에서 10% 내외를 차지하는 곡물류 수출은 쌀과 옥수수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작황이 좋았던 1998년의 경우에는 두 품목의 수출액이 15억불에 달하였다. 최근 쌀의 경우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아 경쟁력이 있으나 옥수수의 경우 반대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아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요 산지인 동북부를 중심으로 수출보조금의 지원 아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쌀과 옥수수의 경우 국내 수급에 따라 수출 물량이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국제곡물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쌀의 수출은 1998년 9억 달러를 상회했으나 2003년에는 5억 달러 이하로 떨어져 수입선으로서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표 4-7).

한국과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수출 증가율이 높지 않은 편인데, 이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국내 소비 증가와 생산비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 증가의 둔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념채소류 중 고추의 수출액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최근 산업피해구제조치와 관련 한중간의 무역마찰 품목으로 대두한 마늘의 경우 2000년 이후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마늘의 수출액은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추, 양파에 비해 국내 생산이 기후나 자연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양파의 수출은 마늘과 같이 수출 증가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표 4-7. 중국의 주요 품목별 농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률(%)
곡물류	1,134,683	1,638,855	1,034,130	1,651,223	2,589,749	22.91
쌀	651,894	561,054	329,180	381,747	494,699	-6.67
옥수수	450,018	1,047,218	625,380	1,166,847	1,766,563	40.76
채소류	1,518,755	1,544,583	1,750,143	1,883,286	2,180,735	9.47
고추	47,368	50,491	65,902	74,377	108,679	23.07
마늘	106,806	136,277	207,103	344,667	354,897	35.01
양파	43,037	41,171	57,743	45,054	85,068	18.57
과일/견과류	424,997	417,277	435,933	555,062	751,613	15.32
오렌지류	40,163	45,995	40,353	55,738	75,577	17.12
사과	75,936	96,521	100,646	149,414	209,999	28.96
복숭아	563	874	1,357	2,837	4,293	66.17
포도	2,226	1,138	1,734	7,711	16,666	65.42
밤	64,259	67,786	56,947	51,660	52,973	-4.71
잣	133	16	12	7	16	-41.11
유지작물	231,165	-	-	-	-	-
대두	61,690	64,001	77,166	76,686	86,988	8.97
땅콩	56,152	34,731	39,793	41,216	49,220	-3.24
축산물	690,626	753,627	842,126	665,801	646,130	-1.65
쇠고기	25,718	23,534	32,652	19,024	14,875	-12.79
돼지고기	67,378	68,617	135,781	209,464	269,336	41.40
닭고기	11,399	18,510	25,575	22,523	36,673	33.93
천연꿀	74,761	84,121	96,013	77,940	103,152	8.38
인삼	53,294	50,911	48,364	56,093	44,908	-4.19
화훼류 (절화)	5,897	4,567	5,402	6,547	-	-

주: 증감률은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하며, $A_t = A_0(1+r)^{t-1}$ 에서 r 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과일 및 견과류 수급 동향은 이들 품목이 한중간에 양 방향으로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 남방지역에서 주로 생산, 수출되는 오렌지류의 경우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소비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우리의 관심품목인 사과는 최근 들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복숭아의 경우에도 수출의 절대액은 작지만 수출 증가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중국의 배는 한국산 배와 종류와 품질이 상이하지만, 사과의 경우 품질이 유사하여 중국산 사과의 생산능력 확대와 수출 증대는 제3 수출 시장에서의 수출경합과 우리나라 사과의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도의 수출은 식품 소비패턴의 고급화와 국내 소비 증가로 인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과 수출경합하고 있는 밤의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잣은 수출의 일관성이 없고 수출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유지작물의 대표적 품목으로서 대두는 생산비 상승 및 소규모 경영에 따른 비효율, 그 밖의 작물과 비교한 상대적 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에 따라 국내 생산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국내 소비는 계속 증가하여, 수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축산물 생산이 증가될 경우 대두는 오히려 수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작물로서 땅콩의 수출도 상당한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축산물 수출은 닭고기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이 감소세이며, 특히 돼지고기와 같이 전통적으로 중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의 수출도 정체상태이거나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 수출은 2000년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쇠고기의 수출 감소는 국내 생산 증대의 한계와 국내 소비의 증대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국은 쇠고기 생산에 비교우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유망 품목인 화훼류(절화)의 경우 중국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시장에서 우리와의 수출경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농림축산물 총수출의 증가는 최근 거의 정체상태인데 이는 전통적인 농림산물의 수출은 일정한 추세로 증가하는 반면, 축산물의 경우 모든 품목이 수출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의 농림축산물의 총수출은 곡물을 중심으로 한 농림산물 수출의 둔화 내지 수입으로의 전환과 소득증대

와 축산물 소비 확대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각 품목이 총 농림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수산물은 일관성 있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은 채소류로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류의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의 절대액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총 농림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였다. 곡물수출은 국내 수급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출입이 결정되므로 비중도 연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 4-8. 품목별 중국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단위: %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품목	비율												
1	수산물	10.5	수산물	9.0	수산물	9.4	수산물	9.4	수산물	10.5	수산물	10.4	수산물	11.6
2	채소류	7.9	채소류	8.0	채소류	7.4	곡물류	8.5	채소류	7.9	곡물류	7.8	채소류	7.8
3	육류	6.4	육류	7.1	육류	6.3	채소류	8.0	곡물류	6.4	채소류	7.4	곡물류	4.9
4	유지 종자	2.5	담배	4.0	곡물류	6.2	육류	6.1	육류	5.0	육류	3.0	육류	3.2
5	과일류	2.2	유지 종자	2.4	담배	2.8	과일류	2.0	유지 종자	1.9	유지 종자	1.8	유지 종자	1.8
6	약재	2.2	과일류	2.2	식물성 유지	2.7	차	2.0	과일류	1.8	과일류	1.6	과일류	1.6
7	식물성 유지	2.0	곡물류	1.9	과일류	1.8	식물성 유지	1.5	차	1.8	차	1.6	차	1.5
8	차	1.4	약재	1.7	차	1.6	약재	1.2	생사	1.3	면화	1.4	생사	1.1
9	생사	1.5	식물성 유지	1.7	약재	1.5	생사	1.2	약재	1.1	생사	1.2	원목, 목재	0.9
10	원목, 목재	1.2	차	1.5	생사	1.4	원목, 목재	0.7	원목, 목재	0.7	약재	1.0	약재	0.9
11	곡물류	0.7	생사	1.4	유지 종자	1.3			식물성 유지	0.4	식물성 유지	0.8	식물성 유지	0.9
12	담배	0.03	원목, 목재	1.2	원목, 목재	1.2			꿀	0.2	원목, 목재	0.8	꿀	0.4
	합계	38.5	합계	42.9	합계	50.8	합계	40.6	합계	39	합계	38.8	합계	36.6

자료: 일중경제협회, 중국농업

결론적으로 1995~2001년간 중국의 농림수산물 수출에서 일관성 있게 10위 이내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수산물, 채소류, 육류, 유지종자, 과일류, 약재, 식물성유지, 차, 생사, 원목 및 목재 등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 품목의 생산과 수출에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개방 압력도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2.3. 중국의 농산물 무역 전망

향후 중국의 농산물 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농업의 국제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농업의 여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내 농업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으로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면 중국의 노동집약형 농산물(축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반면에 토지자원집약형 농산물(식량작물)의 상대적인 생산 감소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黃季狷 2000). 그는 구체적으로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고 구조조정이 촉진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1) 곡물 및 면화 생산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축산물과 원예작물의 생산은 증가할 것이다.
- 2) 농업자원 재배분과 생산구조조정, 이농으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농민 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 3)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 후생은 증대될 것이다.
- 4) 우유, 양모를 제외한 돈육, 가금육 수출이 급증할 것이다.
- 5) 원예작물(채소, 과일, 화훼) 수출이 촉진될 것이나 실질적인 수출 능력은 품질, 저장, 운송, 신선도 유지 등 기초시설 미비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6) 옥수수, 유지작물, 당료작물, 대두, 면화 등 경종업 생산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곡물 수입은 증가하여 식량자급률이 하락할 것이다.

중국농업대학(199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WTO에 가입할 경우 2005년까지 농산물 생산 감소는 밀 3.8%, 잡곡 2.3%, 유지작물 0.5%로 전망한 반면에, 곡물 중 유일하게 쌀 생산은 0.4% 증가하고 채소와 과일 생산은 0.7%, 돼지고기와 가금육 생산은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孫東升(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토지집약형 경종작물(식량과 유지작물)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으나, 노동 집약형 농산품(축산품과 과일)의 생산은 모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농업이 개방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교우위의 원칙에 따라 농업 생산과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시장개방은 중국 내의 지역 간 전문화와 품목별 생산집중 현상도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종작물(식량과 유지작물)에 대해 중국은 평균적으로 비교우위가 없지만, 생산지별 비교우위 분석에 의하면, 지역별 비교우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밀의 경우 평균적으로 비교열위에 처해 있어 국제경쟁력이 없으나 하북·동북·하동·하남지역에서의 밀 생산은 상당한 비교우위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비교우위를 가지는 지역은 헤이룽장성, 산둥성, 하북성 등인 반면에 서북 및 서남지역의 밀 생산은 뚜렷하게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국 축산업의 경우 비교적 강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축산물 생산 및 경영방식에 따라 비교우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영집단사육 방식의 효율이 가장 낮고, 상업적 대규모 농가사육의 효율이 가장 높으며, 소규모 개인농가사육의 경영효율은 중간 수준이다. 한편 중국의 원예작물(과일, 채소, 화훼) 생산은 저렴한 노동비용의 유리함 때문에 뚜렷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앞으로 중국이 품질 다양화, 고급화, 규격화 등 선진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통해 충분히 생산 및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FAO(2000) 결과에 따르면 곡물, 유지작물, 면화 등 토지집약적 작물의 재배는 축소되고, 노동집약적 농업인 축산 및 원예 부문의 생산은 확대되는 등 중국 농업의 구

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곡물 자급률은 하락할 것이나 곡물 부문에 고용되던 자원이 곡물 이외의 부문으로 이동하는 등 자원 배분의 효율화와 분업화가 촉진될 것이라 하였다.

1.3. 한·중 농산물교역의 전망과 시사점

1.3.1.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중국농산물

가. 곡물

중국은 인구대국으로 식량 수급이 국가의 중대 과제이다. 따라서 곡물의 경우 수출보다는 국내 수급 안정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을 계기로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곡물류 중에서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수출 여력이 있는 작물로는 쌀과 옥수수를 들 수 있다.

□ 쌀

중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작황에 따라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하기도 했으나 1990년대 후반 이래 재배면적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간 60만 톤에서 350만 톤 정도를 순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 취향에 맞는 중·단립종 쌀은 헤이룽장성과 요령성, 길림성 등 동북지방에서 약 80%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³ 특히 헤이룽장성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개간 사업을 전개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2000년 동북지역 전체 벼 재배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단수도 1980년대 초반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벼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쌀

³ 孫東升(2001) “경제 세계화, 비교우위 및 중국 농산물 무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2001.

생산량은 1억 6천만 톤으로 1997년의 2억 톤 대비 20%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단립종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자포니카 계통 쌀 위주의 수매 정책과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자 기호 변화에 힘입어 동북 지역에서 밀과 옥수수, 대두 등이 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농업정책이 쌀 품질 고급화와 수익성 향상으로 전환되면서 동북지역에서도 대두와 소맥 생산이 늘고 있다. 벼 재배로 인한 수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토양 보존을 위해 지력회복 효과가 있는 대두 재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벼 재배면적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로 장립종 계통의 쌀 생산이 감소하고 중·단립종 생산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의 쌀 교역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국의 동북지역은 물 부족과 환경 문제가 벼 재배면적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유기농 쌀과 녹색식품 쌀 등의 고품질 쌀 생산을 장려하고 있어 쌀 생산량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중·단립종 쌀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일정 규모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7-98년 주요 농산물의 생산비 자료를 경쟁국과 비교한 결과 쌀 생산비는 중국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더욱이 최근 중국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농업세를 완전 폐지하였거나 곧 폐지할 계획이며, 기타 농민이 부담하는 납부금도 폐지할 계획이므로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다주어 결국 중국의 쌀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중국은 쌀의 TRQ 물량을 WTO 가입 초기 266만 톤에서 2004년 532만 톤으로 증량하는데 합의했다. 쿼터 물량에 대한 관세는 1%, 장립종과 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50%로 하며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쿼터 물량을 절반씩 배정하였다. 그러나 TRQ 물량은 수입국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의무수입 물량이 아니므로 중국의 쌀 수입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9. 주요 농산물 생산비 국제비교(1997~98년)

	국가	생산비 (달러/kg)	단위수량 (kg/무)	생산비 구성(%)				
				노동력	기계	비료,농약	토지	기타
쌀	중국	0.114	404	42	13	22	0	23
	미국	0.246	424	9	26	17	19	29
밀	중국	0.147	244	35	17	22	0	25
	미국	0.140	194	9	21	24	12	34
	캐나다	0.057	151	9	28	37	3	24
옥수수	중국	0.106	347	46	11	23	0	21
	미국	0.106	563	9	29	20	24	18
대두	중국	0.226	112	46	11	11	0	32
	미국	0.213	173	8	27	14	31	20
채유종실	중국	0.315	62	55	7	18	0	20
	캐나다	0.111	95	9	28	37	3	25

주: 중국의 생산비는 토지용역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임.

자료: 이재욱 외(2002) 54쪽 표 4-6을 재구성하였음.

오히려 중국 쌀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경우 WTO 가입으로 쌀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실제로 최근 세계 쌀 수출 시장에서 중국 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쌀 수급 추세에 따르면 중국의 쌀 수출 능력은 200~300만 톤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곡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상태이므로 당분간 수출보다는 국내 수급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식량주산지 성과 식량 소비지 성간의 식량 공급계약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 여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중국은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2년부터 “무공해식품 행동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업부에 ‘농산물품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무공해 농산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헤이룽장성 중심의 고품질 자포니카 쌀 생산기지, 양자강 유역(절강, 강소, 강서, 호남성 등 지역)의 양질의 인디카 쌀 생산기지, 운남·귀

주·북건성 등 지역의 특종 쌀(자미, 흑미, 녹미, 연미 등) 생산기지, 그리고 쌀 주산단지의 가공품 수출기지 등 지역별 비교우위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동북아경제협력체가 출범하면서 쌀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거나 시장접근물량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중국산 고품질 쌀 수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표 4-10. 중국의 쌀 수급 추이

단위: 만 톤

연도	생산량	수입	수출	순수출	수매가격 (위안/kg)	소매가격지수 (전년=100)
1995	18,523	164.5	5.7	-158.8	1.09	138.1
1996	19,510	77.4	27.7	-49.7	1.33	100.8
1997	20,073	35.9	95.2	59.3	1.48	84.9
1998	19,871	26.0	375.6	349.6	1.46	99.7
1999	19,849	19.1	271.7	252.6	1.33	98.6
2000	18,791	24.9	296.2	271.3	1.13	86.2
2001	17,758	29.3	187.0	157.7	1.11	104.5
2002	17,454	23.8	199.0	175.2	-	99.1
2003	16,066	25.9	261.7	235.8	-	

□ 옥수수

옥수수는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생산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으로 2003년 생산량은 197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1억 2천만 톤을 기록하였다. 중국에서 옥수수는 동북, 화북 및 서남 지역 주민의 주식이고 사료용으로 소비되는 동시에 경공업과 의약공업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옥수수는 1970년대 이후 신품종 보급이 확대되면서 단수가 크게 늘기 시작하고 재배면적도 증가하여 총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북지역의 춘

계 옥수수와 화북지역의 하계 옥수수가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중국의 옥수수 생산비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995년 이후 생산비가 증가하지 않은 데다 정부의 농업세 폐지로 향후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옥수수 수입국인 한국이나 일본 등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수출에 유리한 입장이다.

1980년대 이후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옥수수가 주식으로서의 기능은 위축되었지만 가공식품의 원료와 사료용 및 공업용으로 계속 소비되고 있으며 수출 농산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작황 부진으로 옥수수를 수입했던 1995~96년을 제외하면 옥수수 순수출국으로서 2000년, 2002년 및 2003년의 수출량은 1천만 톤을 넘었다.

표 4-11. 중국의 옥수수 수급 추이

단위: 만 톤

연도	생산량	수입	수출	순수출	수매가격 (위안/kg)
1995	11,199	526.4	11.5	-514.9	0.86
1996	12,747	44.7	23.8	-20.9	1.06
1997	10,430	0.3	667.1	666.8	1.23
1998	13,295	25.2	469.2	444.0	1.23
1999	12,808	7.9	433.3	425.4	1.14
2000	10,600	0.3	1,047.9	1,047.6	0.96
2001	11,409	3.9	600.0	596.1	0.94
2002	12,131	0.8	1,167.5	1,166.7	-
2003	11,583	0.1	1,639.1	1,639.0	-

⁴ 孫東升(2001) 참조.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옥수수 TRQ 물량을 2000년 450만 톤에서 2004년 720만 톤으로 증량하고 쿼터 내 관세율은 1%, 쿼터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76%로 하되 65%로 점차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소득이 향상되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사료곡물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000년 한국의 중국산 옥수수 수입액은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6억 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이 수입하는 옥수수는 대부분 미국산과 중국산이므로 외형상 과점시장처럼 보이지만 가격 결정은 완전경쟁 시장처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한국의 옥수수 수입처는 중국과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⁵ 따라서 이들 국가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소량 주문 가능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산 옥수수의 수입가격이 낮아져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옥수수는 대부분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CMA)이고 사료용 옥수수의 실행관세도 매우 낮아(2000년 2.4%)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나. 채소

중국의 채소산업은 생산 규모와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여 양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의 채소 생산국이 되었다. 채소 재배면적은 1978년 333만ha에서 2003년에는 1,795만ha로 5.4배 증가하였다. 이는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동기간 17.6% 감소한 것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이 중국의 채소 생산이

⁵ 양승룡(2001), “한국 농산물 수입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의 시장지배력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42권 제1호, 2001. 3. 한국농업경제학회.

증가한 것은 생산 농가 입장에서 채소의 수익성이 산업 내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산둥, 하남, 강소, 광둥, 하북성이 중국의 대표적인 채소 주산지이며, 특히 산둥성은 2003년 기준 203만ha에 8729만 톤의 채소를 생산하여 면적과 생산량에서 중국 전체의 각각 11.3%와 16.2%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채소산지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인접한 산둥성은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최대 산지로서 이들 품목을 비롯한 주요 채소류의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어 산둥성의 채소산업은 우리나라 채소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 채소 재배면적에서 주요 작목의 재배면적 비중은 배추가 15%로 가장 높고 무, 오이, 고추, 마늘, 당근 등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비율이 재배되고 있다. 이들 6가지 작목의 재배면적(2000년 기준)은 전체 채소재배면적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2. 중국의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단위: 천ha

	배추	무	오이	고추	마늘	당근	총계
1995	1,133	768	524	352	402	158	10,616
1996	1,394	1,021	721	383	409		11,693
1997	1,638	1,026	823	403	439		11,288
1998	1,826	1,086	932	444	457		12,293
1999	2,043	1,137	1,066	503	488		13,347
2000	2,023	1,214	1,168	553	560	321	15,237
2001	2,646	1,124	847	558	681	352	16,403
2002	2,734	1,160	904	573	759	373	17,353
2003	2,699 (15.0)	1,219 (6.8)	936 (5.2)	603 (3.4)	795 (4.4)	409 (2.3)	17,954 (100.0)

주: ()는 전체 채소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中國農業統計資料』 각 연도. 中國農業出版社.

표 4-13. 중국의 주요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2003)

품목	재배면적(천ha)			생산량(만 톤)		
	중국	한국	중국/한국	중국	한국	중국/한국
배추	2,699	43	63	10,197	246	42
무	1,219	29	42	3,881	134	29
오이	1,168	7	174	3,551	45	79
고추		58			13	
마늘	795	33	24	1,556	38	41
당근	409	3	124	1,312	12	109

자료: 1. 『中國農業統計資料』 2003. 中國農業出版社.

2.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중국의 주요 채소 품목별 생산규모를 2003년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국과 단순비교해 보면, 당근이 109배로 가장 큰 차이가 나며, 다음이 오이, (고추), 배추, 마늘, 무 순이며 모두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중국의 채소 수급 전망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중국 국민 1인당 연간 채소 소비량은 2000년의 238kg에서 2015년에는 354kg으로 증가하고, 총소비량은 동기간 3억 6,180만 톤에서 5억 1,381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중국의 채소 총생산량은 동기간 4억 2,398만 톤에서 5억 5,298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결과 2005년 이후 매년 약 4,000만 톤 가량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국내 채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채소 수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4-14. 중국의 채소 수급 전망(2005~2015)

단위: 만톤

구분	2000	2005	2015
총수요량	36,180	40,835	51,381
총생산량	42,398	45,364	55,298
잉여량	6,218	4,529	3,917

자료: 劉江主. “農產品供求總量平衡研究”, 『21世紀初中國農業發展戰略』, 中國農業出版社.

중국의 주요 품목별 채소 수급 및 대 한국 수출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배추

중국의 배추 생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5년의 배추 재배면적은 113만ha이었으나 2003년에는 270만ha로 2.4배 증가하였다. 배추의 주산지는 산동, 하북, 하남성이며, 특히 산동성에는 우리나라 김치가공기업이 진출하여 계약재배 등 형태로 직접 배추를 생산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나 토양 조건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중국에 우리나라 배추 종자를 가져가 재배함으로써 국내산과 유사한 품질의 배추를 훨씬 저렴한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김치가공산업의 대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김치 제조에 필수 재료인 양념채소류의 조달에도 유리하여,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이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해외 기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신선 배추 수입은 1997년에 49톤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만톤을 돌파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가 최근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배추 수입이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파동이 심한 것은 중국 현지의 공급 요인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수요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내 배추 공급이 부족할 경우 언제든지 중국으로부터 신선 배추가 수입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으로부터의 신선 배추 수입은 국내 김치산업의 성장 여부 및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5. 우리나라 대중국 배추 수입 추이

단위: 천달러, 톤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	13	-	55	1,653	49	478	1,388
수량	-	49	-	349	11,297	224	2,148	8,725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 무

중국의 무 재배면적은 1996년 이후 100~120만ha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신선 또는 냉장 무 수입은 아직 많지 않으나 건조 무 수입이 연간 약 1,500~3,0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에서 생산한 무는 품종과 품질 등이 우리나라의 무와 유사하므로 건조 무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6. 우리나라 대중국 무 수입 추이

단위: 천달러, 톤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신선, 냉장	금액			0		41	59	41	40
	수량			2		227	531	314	225
건조	금액	649	1,193	696	785	1,296	744	667	1,161
	수량	1,455	2,337	1,602	1,805	2,760	1,920	1,725	2,494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 오이

중국의 오이 생산도 증가하여 왔다. 1995년 52만ha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90~100만ha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오이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직 신선, 냉장 오이의 수입은 없으나 일시저장 오이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995년에 967 톤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에는 5314톤이 수입되어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식초·초산 조제 오이도 아직 수량은 많지 않으나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외식산업의 발달과 패스트푸드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중국으로부터의 오이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산 오이의 품질은 온실시설, 재배 기술 등이 낙후되어 상품률이 저조하고 온실 내에서의 농약 살포 등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 오이, 가지, 딸기, 토마토 등 중국의 시설채소는 대부분 난방 및 환경제어시설이 없는 재래식 일광온실에서 생산되고 있어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표 4-17. 우리나라 대중국 오이 수입 추이

단위: 천달러, 톤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일시저장	금액	309	202	151	160	526	498	1,035	1,151
	수량	967	677	611	595	1,820	2,046	5,022	5,314
식초, 초산 조제	금액		31			13	9	54	181
	수량		76			42	41	189	508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 고추

중국의 고추 재배면적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서 재배되는 고추는 품종이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중국산 수입 고추의 품종은 산동성 익도지역이 주산지여서 익도산 고추라 불린다. 익도산 고추는 중국 국내 수요가 적어 생산량도 전체 고추생산량의 10%미만이다. 그러나 익도산 고추의 한국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익도산 고추의 재배지역이 내몽고, 하남성, 길림성 등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고추 수입은 1995년에 16,118톤이었으나 2003년에는 53,687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국내 고추 작황이 부진하여 중국산 고추 수입이 전년 대비 51%나 대폭 증가하였다. 건고추는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품질(색도, 맛 등)이 양호해 수입이 늘고 있다.

표 4-18. 우리나라 대중국 고추 수입 추이

단위: 톤

	1995	1998	2000	2001	2002	2003
신선, 냉장		1	3	5	9	
건조(미분쇄)	4,714	5,306	5,843	8,393	6,926	10,428
건조(분쇄)	94	107	500	608	913	1,679
기타						50
고추장	205	290	405	38	69	216
합계	16,118	14,207	23,017	35,366	35,456	53,687

주: 합계는 1차가공품을 신선품목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켰음.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중국산 고추의 가격경쟁력을 살펴보면, 건고추는 가격이 한국산 화건보다 높지만 양건보다는 낮다. 그러나 한국산 화건과의 가격차는 2001년 121%에서 2003년 108%로 차츰 근접하고 있는 반면, 한국산 양건과의 가격차는 96%에서 81%로 더욱 벌어지고 있어 중국산 건고추의 가격경쟁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산 냉동고추는 품질은 한국산 화건과 비슷하나 가격은 60~85% 수준이어서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표 4-19. 중국산 고추의 국내도매 가능가격

단위: 원/600g, %

구분		2001	2002	2003
중국산	건고추(A)	5,767	5,217	5,025
	냉동고추(B)	2,879	2,321	3,900
한국산	양건(C)	5,996	5,391	6,124
	화건(D)	4,773	3,882	4,631
A/C		96.2	96.8	82.1
A/D		120.8	134.4	108.5
B/D		57.7	60.0	84.2

주: 1) 중국산 도매가격은 CIF가격+관세+부대비용+수입업자 이윤

2) 환율은 1,200/\$ 적용

자료: 농림부장관 특별보고자료(2004.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향후 중국산 고추 수입은 건고추의 경우 국내 작황에 따라 변동하겠지만 냉동고추와 기타소스는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가공용으로나 요식업 체용으로 국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익도산 고추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품종과 똑같고, 줄기에 달린 채로 자연 건조되어 색택이 좋고 매운맛이 국산보다 덜하다. 비록 건조 과정에서 다소의 품질 하락이 발생하나,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고추는 그 중에서 좋은 것만을 선별하여 수출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용 건고추의 품질은 국내산 양건과 화건의 중간 수준이며, 냉동고추는 화건 중품 수준이다.

표 4-20.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의 품질 비교

구분	색도 (캡산틴)	매운맛 (캡사이신, mg)	당분 함량 (%)
국산(양건)	15.4	118.1	25.5
중국산(익도산)	20.5	9.8	15.4

자료: 농협식품연구소, 2001.

□ 마늘

중국의 마늘 생산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의 재배 면적은 1995년 대비 약 2배로 늘어났다. 특히 산동성의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중국 전체 생산의 28.9%를 차지하여 최대의 마늘산지이며, 이곳에서 생산된 마늘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의 마늘 수출은 신선·냉장마늘이 전체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주로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 마늘 수입은 냉동 및 식초·초산조제마늘 위주로 이루어지며, 신선·냉장마늘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입되다가 2000년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SG)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SG가 해제되면서 수입이 재개되었다.

표 4-21. 우리나라 대중국 마늘 수입 추이

단위: 톤

	1995	1998	2000	2001	2002	2003
신선, 냉장	5,788	25,633				
냉동	3,081	7,795	3,805	7,832	10,159	13,339
건조	10	421	3,681	31	62	130
일시저장			27			
식초, 초산조제	493	2,128	2,735	3,150	3,617	5,390
탈피			195			1,006
기타			76	12,618	13,180	299
합계	12,198	39,747	23,234	26,476	30,598	40,182

주: 합계는 1차가공품을 신선품목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켰음.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중국 마늘의 가격경쟁력을 살펴보자. 중국산 신선·냉장마늘은 2003년까지 국내 도매원가가 2,500원~3,000원/kg으로 국내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MMA이외의 민간수입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3년 11월 이후 국내 마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산 신선마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입량이 증가하자 중국의 산지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중국산 신선·냉장마늘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은 국내에 수입되어 다진 양념이나 장아찌 원료로 사용되는데, 중국산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 수입원가가 같은 용도로 사용되던 국내산 하품 가격의 1/2~1/3 수준에 불과하여 높은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민간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4-22. 중국산 마늘의 국내도매 가능가격

단위: 원/kg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중국산	신선·냉장	2,629	2,602	3,046	2,826	2,539
	냉동	793	1,114	1,332	1,156	746
	초산조제	711	1,027	1,312	1,156	906
한국산	상품	2,130	1,532	1,633	2,052	2,142
	하품	1,591	1,215	1,365	1,535	1,648

주: 1) 한국산 도매가격은 가락동도매시장 상품 기준

2) 관세는 2004년(신선냉장 360%, 냉동 27%, 초산조제 30%)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관세 적용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우리나라의 마늘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산 신선·냉장마늘은 가격경쟁력이 낮아 여전히 수입이 어려울 것이나,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은 저율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수입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 당근

중국의 당근 생산도 확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5년 당근 재배면적은 16만ha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41만ha로 2.6배 증가하였다. 중국의 당근 주산지인 하남과 산둥성이며, 이 두 개 성의 생산량이 중국 전체 생산량의 27.7%를 차지한다.

중국산 당근은 주로 일본과 한국 및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의 수출은 한국 내 가격 급등 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량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당근 수입은 신선·냉장당근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1995년에 115 톤에 불과하던 중국산 신선·냉장 당근 수입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 2003년에는 1995년 대비 약 235배에 해당하는 26,985 톤에 달했다.

중국에서 수입된 당근의 대부분이 대형 유통업체와 식자재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중국산 당근은 적지적작, 신품종 도입, 재배 기술 향상 등으로 맛, 육질, 설탕, 크기 등 품질이 전반적으로 국내산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산 당근의 국내 도매원가는 390~480/kg으로 국산도매가격보다 15% 가량 낮으며, 특히 계절적으로 6~11월에는 국산가격의 40%로 가격경쟁력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의 당근 수입은 연중 내내 수입되기보다는 하반기를 중심으로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23. 우리나라 대중국 당근 수입 추이

단위: 톤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신선, 냉장	115	263	3,570	4,556	9,248	11,282	17,652	26,985
냉동	10	10		4	33	87	147	183
건조	781	1,408	390	255	263	673	777	945
일시저장						0	16	81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 김치

2001년까지는 중국으로부터의 김치 수입이 많지 않았으나 2002년에 1천 톤을 돌파하던 2003년에는 급증하여 2만 8천 톤을 초과하였다. 2002년 가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김치 수입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첫째, 김치 원재료인 배추와 무의 국내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되었고 둘째,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배추의 품종과 품질 및 김치 제조기술이 좋아져 중국산 김치의 품질이 제고되었고 셋째, 최근 국내 김치 제조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 설립이 증가하였으며 넷째, 국내 음식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하여 국내 고랭지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며, 그 결과 염가의 중국산 김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는 대부분 산둥성과 베이징 인근에 있는 한국인 소유의 현지 기업 20여 곳에서 만들어지며, 이들은 타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출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중국산 김치의 kg당 평균 수입 원가는 500원 내외로 국내 평균가격(1,500원/kg)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에 중국산 김치의 품질은 한국산에 비해 떨어지나 요식업을 중심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산 김치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김치의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소비량이 약 100만 톤이며 30~40%를 요식업소에서 소비하는데, 요식업 김치 수요의 20~30%를 중국산 김치로 충당한다고 한다면 연간 중국으로부터의 김치 수입 규모는 2003년 수입량보다 2~4배 많은 6~12만 톤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표 4-24. 우리나라 대중국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수입 추이

단위: 천달러, 톤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15	15	5	33	177	195	468	7,359
수량	14	16	10	90	467	393	1,042	20,070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우리나라의 2003년 중국산 채소류 수입은 2000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주요 수입품목은 배추와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당근 등이며, 오이와 토마토도 식물검역상 수입규제가 해제되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품질 차이가 별로 없는 무와 소비자 기호는 다르지만 품종이 비슷한 가지도 향후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신선·냉장 품목보다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1차 가공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 가운데 노동집약적 품목에 속하는 채소류는 향후 중국의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특히 소득 증대와 더불어 고급 채소류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증가할 경우 품질과 종류가 다양화되어 수출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농산물 수출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채소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녹색식품 생산 확대 등 고품질 환경농산물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DDA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관세 추가 하락이 예상되므로 중국산 채소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3.2. 전망과 시사점

중국은 향후 지속적인 고성장과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전출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잉여노동력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도 노동집약적인 농산물 생산에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이들 품목과 관련하여 수입개방 압력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발작물 중 곡물보다는 원예, 채소, 과수, 특작물 등의 시장개방 압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쌀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지집약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지만 중국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생산 형태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요소집약도의 전환 ; factor intensity reversal). 그러나 경영규모의 영세성, 농업용수의 부족, 농촌노임의 상승 등 쌀 생산 증대의 제약요인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농촌지역의 유희 노동력을 흡수하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곡물보다는 국내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축산, 채소, 과수 부문에 정책의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 역시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접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의 축산물 수출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축산물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질병, 약물잔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알맞은 방역시스템과 동식물 검역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수출 증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10위 이내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은 쌀과 옥수수 등 곡물, 마늘과 양파 등 채소류, 사과와 복숭아 등 과실류, 닭고기로서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 품목의 수출 전망은 밝고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소, 과일, 화훼 등 원예작물의 수출은 촉진될 것이나 수출은 저급품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쌀의 경우에는 수출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이로 인해 중국의 한국 쌀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예상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표 4-25. 중국의 주요 수출전망 품목

요인	분야 및 품목
중국의 농업 여건과 요소집약도	- 노동집약적인 채소, 과일, 원예 - 농업용수에 제약을 받지 않는 품목
중국의 농업정책	-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국내 소비 증대 품목으로서 축산, 채소, 과일, 원예 농산물
생산 증가 품목	- 유지작물, 채소, 과일, 축산
수출 증가 품목	- 쌀, 옥수수, 마늘, 양파, 사과, 복숭아, 닭고기
일관성 있는 대량수출품목	-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유지종자, 약재, 차, 생사, 식물성 유지, 원목 및 목재
중국의 농산물 무역전망	- 채소, 과일, 화훼 등의 수출이 증가, 반면 옥수수, 대두, 유지작물, 설탕, 면화, 곡물의 수입 증가
한국과의 농산물 무역관계	- 쌀, 과일, 마늘, 양파 등의 수출에 불만 가능성

한편 중국의 농산물 수입은 소득탄력성이 높은 유지작물, 축산물, 과일 및 견과류,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채소류와 과일류 등의 무역은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산업내무역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중간의 농산물 무역은 상이한 품목 간의 분업화와 전문화뿐만 아니라 동일한 품목 내에서도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분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우리나라의 반덤핑 제도와 사례

2.1. 반덤핑 제도의 연혁과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반덤핑 제도의 법적 근거는 WTO의 GATT 1994 6조의 규정과 동 조항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있다. 동 협정을 국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반덤핑에 관한 국내법을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해 왔으며, 현재는 관세법 제 51조~제56조에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51조~제56조의 주요 내용은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 덤핑 및 실질적 피해의 조사, 반덤핑관세 부과 전의 잠정조치, 반덤핑관세의 부과 시기, 반덤핑관세에 관한 재심사 등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반덤핑 제도의 운영은 한국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잠정조치의 시행,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수락 그리고 재심사 결정 등 반덤핑관세 제도의 중요 사항에 대한 최종판정은 무역위원회가 판단하여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재정경제부는 필요시 관세심의위원회에게 자문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2. 반덤핑관세의 부과절차

수출국의 덤핑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내 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무장관인 재경부장관에게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러

한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에 필요한 조사의 신청으로 대체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조사 대상물품과 공급자 및 조사기간을 재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개시 결정 사항을 조사신청자, 공급자와 공급국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덤핑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하고 조사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사실이나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결과 제출일의 다음 날부터 본조사에 착수하여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재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장관은 본조사 결과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반덤핑관세의 부과 조치는 조사신청의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부과조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반덤핑관세의 부과조치나 수락된 약속은 총리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1조 제2항의 국내 반영).

2.3. 반덤핑제도의 운영 현황

1987년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04년 말까지 총 151건의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했는데 이중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34%에 해당하는 51건이었다.

- 덤핑방지관세 : 51건

폴리아세탈수지, 정제인산, 불베어링, 전기면도기, 일회용라이터, 전기다리미, 알칼리망간건, 소다회, PS인쇄판, 셀프복사지, H형강, MDF

- 세이프가드 : 22건

마늘, 유제품, 새우젓, 돼지고기통조림, 당면, 고추가공제품, 자전거 등

- 불공정무역: 78건

원산지 위반표시, 지적재산권 위반, 영업 비밀 침해, 선적불이행 등

농산물의 경우 단연 덤핑방지 조치보다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의한 구제조치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농산물은 수출국의 수급변동에 따라 수입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덤핑마진의 계산이 어려운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 2004년 말까지 재심을 포함한 반덤핑조사 신청은 총 84건이었다. 이 중 실제 반덤핑 조치가 적용된 경우는 51건(61%)이었고, 신청철회 및 기각은 16건(19%), 피해부정 판정은 10건(12%), 기타 2건, 조사중 5건이었다.

2.4.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비시장경제 국가들에 대해 보다 신축적인 방식으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까지 중국을 포함한 비시장경제 국가들에게 중국의 통계자료보다는 제3국의 가격이나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조건을 엄격하게 지켜 왔다. 실제로 중국산 휴대용 라이터의 정상가격을 중국의 국내 판매가격 대신 제3국의 수출가격을 중국의 정상가격으로 사용한 예가 있다. 그러나 이후 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는 중국의 특정 산업의 경우 시장경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KTC가 특정 상품의 경우 시장경제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비시장국가의 국내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절차를 거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예는 1992년 정제인산, 1993년 소다회, 1996년 염화코린 등이다. 정제인산의 경우 중국의 생산자 및 수출자들에게 내수 시장가격과 수출가격에 대한 자료제출 등 덤핑조사 질문서를 송부했으나 답변서를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비시장경제국의 덤핑수출에 대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관행에 따라 비교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했으며, 수출가격은 관세청이 입수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비시장경

제국 상품에 대한 덤핑마진의 산출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김완순 등 1996).

- 1) 대체국 선정 시 경제발전단계의 적절한 고려 여부
- 2) 대체국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
- 3) 덤핑마진이 시장경제국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계산되는 문제
- 4) 덤핑마진의 정확성, 공평성, 예측가능성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시장구조가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국과 같은 체제 전환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참작하여 미국 상무성에서는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생산요소별 가격의 평가를 통해 시장원칙이 적용되는 생산요소는 시장 거래가격을 인정하되 비시장경제 여건에 있는 생산요소는 대체국의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3. 중국농산물에 대한 타국의 반덤핑 제소 사례

3.1. 중국농산물의 반덤핑 사례에 관한 종합 분석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4년 2월까지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한 것이 600건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다. 국제적으로 매 7건의 반덤핑 제소 가운데 1건이 중국제품으로 중국은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농산물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실시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있으며, 대상 제품은 마늘, 배, 땅콩 등 농산물과 벌꿀, 사과즙, 통조림(버섯, 토마토 등) 등 농산가공품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덤핑 안건의 최종 처리 결과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항소에 실패한 경우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둘째는 항소에 부분적으로 성공한 경우로 소수를 차지하며, 셋째로 항소에 성공한 경우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사례 가운데 농산물의 사례가 적지 않으나 대부분 항소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표 4-26. 미국의 대중국농산물 반덤핑 제소 사례

국가	제품명	입안일자	최종판결일자	처리결과
미국	박하주정	1980. 7. 2	1983.10.16	피해 없음 판결
	버섯통조림	1982.11.16	1983.10.16	피해 없음 판결
	마늘	1994. 2.28	1994. 9.26	항소하지 않음. 관세부과(43.45-50.43%)
	별꿀	1994.10.31	1995. 8	협의 중지
	버섯통조림	1998. 2. 2	1998.12.31	관세부과(154-198%)
	농축사과즙	1999. 7. 6	2002. 6.17	항소 제기로 최종 무관세
	레몬산	1999. 12	-	안건 심의중
EU	배(糖水梨)	1982.10.19	1983. 7.20	가격 승낙
	돼지털술	1992. 1.31	1993. 5.18	피해 없음 판결
호주	토마토통조림	1991. 8.27	1997. 3	덤핑 확인
	땅콩	1991. 9	-	무관세 종결
브라질	마늘	1994.12. 8	1996. 1.18	종량세 부과 (5년간, 0.4달러/kg)
	버섯통조림	1996. 9. 2	1998. 6. 2	관세 부과(1.37달러/kg)
캐나다	마늘	1996. 8. 2	1997.2.19	관세 부과(70%)

3.2. 중국농산물의 반덤핑 사례

3.2.1. 사과 주스 반덤핑

1998년 말, 중국 상회는 당시 미국사과협회의 중국기업 대미 수출 반덤핑 행위에 대해 제소 움직임을 포착하여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 1999년 6월 미국 사과 주스협회는 미국상무부에 정식으로 10개의 중국기업을 제소하였다. 2004년 4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 피소기업의 반덤핑 평균세율을 14.88%로, 제소당하지 않은 기업의 세율을 51.74%로 확정하였다. 2000년 7월, 이미 무관

세인 1개의 기업을 제외한 기타 9개의 피소 기업은 미국상무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상소하였다.

2년의 심리 끝에 미국국제무역법원은 2002년 6월 19일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미국국제무역법원은 중국 측이 내세운 5가지 논점을 지지하였다.

- (1) 인도는 농축사과과즙의 주요생산국이 아니므로 대체국으로서 부적합함. 만약 인도를 주요 대체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미 상무국에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합한 기타 국가를 선정하여 재조사해야 함.
- (2) 미국 상무부가 채택한 인도의 사과 가격이 대체가격으로 부적합함. 인도 사과가격은 정부 간섭으로 책정된 것으로 중국 측이 제공한 터키의 가격으로 대체하여야 함.
- (3) 미국상무부가 채택한 인도저축은행의 데이터로 계산한 판매비용과 일반관리비용비율이 HPMC(인도식품회사)가 제공한 실제비율과 부합하지 않음.
- (4) 미국상무부는 수입된 보일러용 연료가격을 대체가격으로 채택한 점이 부적합함. 인도국산 연료가격은 수입연료가격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인도농축사과주스 생산기업이 수입연료를 사용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음.
- (5) 모든 피소기업의 미국 동해 연안까지의 운송비용이 근거가 없음.

미국국제무역법원은 미국상무부의 판결에 법률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중국의 피소기업이 상소한 “미국상무부의 불공정재판”안에 대해 중국 측 승리로 종결하였다.

3.2.2. 마늘 반덤핑

1995년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한 마늘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상무부는 376.67%의 고율의 반덤핑세를 부과하였다. 중국 마늘은 미국시장에서 배척당했고, 대미 수출은 1994년의 6,138톤에서 1999년의 115톤으로 격감하였다.

2001년, 산둥성(山東省)의 지난(濟南)의 일품실업유한공사(一品實業有限公司)는 정식으로 미국상무부에 대해 마늘 수출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1

년의 재심과정을 거쳐 2002년 6월,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세율을 15.26%로 인하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다시 동년 12월 4일, 미국상무부는 세율을 0으로 하는 종결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의 마늘 수출에 있어서 7년간의 제한조치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3.2.3. 버섯 통조림 반덤핑

1998년 1월, 미국 버섯상인연맹은 미국상무부와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중국, 인도, 칠레 기업의 대미수출 버섯통조림상품의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였다. 당해 5월, 미국상무부는 중국 버섯통조림에 대해 장저우(漳州)통조림기업을 포함하여 36개 기업을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12월, 중국 통조림기업에 대해 198%의 반덤핑세율을 징수하였다. 고액의 관세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중국 통조림기업의 미국시장 진입을 막았으며 전국 최대의 버섯 통조림 생산기업인 장저우 통조림기업은 파산하였다.

1999년, 지방(吉邦)기업은 독자적으로 항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5월 지방기업의 최후 관세율은 111%로 결정되었다. 2002년 1월, 지방기업은 2차 항소를 하여 2002년 3월에는 관세율이 다시 46%가 되었다. 지방기업은 미국상무부가 계산 과정에서 수치적용에 오류가 있었음(1.04를 1.40으로)을 발견하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2002년 7월 8일 최후 판결에서 14.67%의 관세율을 판정받았다. 이어 동년 7월 9일, 지방기업은 미국이 원가계산 시 통조림 뚜껍을 재차 계산한 것을 발견하여 재의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2002년 8월9일, 결국 무관세 판결을 받아내었다.

3.2.4. 양봉제품 반덤핑

2001년, 미국 양봉제품 생산업자는 중국 양봉제품이 자신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간주하여 미국상무부에 반덤핑제소를 제기하였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 양봉상품의 원가는 1톤당 1,500달러이어야 하나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던 중국산 양봉제품 가격은 1톤당 1,100달러에 불과하였다. 이

에 따라 그들은 1500달러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중국 양봉제품에 대해 183%의 특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2년 하반기, 안웨이홍후이(安徽鴻匯)식품유한기업은 대량의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미국의 중국 양봉상품에 대한 반덤핑 판정에 대응하였다. 각국의 양봉상품의 수출가격을 참조하여 미국상무부는 홍후이기업이 수출한 양봉상품의 반덤핑행위가 불명확한 점을 인식하였다. 2004년 말, 미국 상무부는 최초 판결에서 결정한 183%의 세율에서 10.73% 세율로 인하 조치하였다. 이는 안웨이홍후이기업과 함께 피소 당한 중국의 다른 양봉제품 기업과 비교해 20.6% 낮은 관세율을 획득하였다.

4.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4.1.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의미

우리나라는 1993년까지 중국을 포함한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 해당 국가의 통계자료보다는 제3국의 가격자료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엄격하게 산출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체제 전환과 시장기능의 도입의 성과를 고려하여 부문별로 중국의 국내자료를 사용하는 등 신축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에서 탈피하여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할 경우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은 그리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를 자제해 온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했을 경우 중국의 덤핑행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내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반덤핑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은 좁아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제3국의 자료를 사용한 정상가격 산출을 기초로 삼아 중국산 농산물의 품목별 덤핑마진과 반덤핑관세의 수준을 계산하고 반덤핑조치를 단행했을 경우 국내농업 보호 효과를 모두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했을 경우의 비용으로 간주하였다.

4.2.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

4.2.1. 국내영향 계측에 관한 모형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부여에 따른 반덤핑조치권리 상실의 비용(국내 농업보호의 가능성의 상실)은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을 계속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고 반덤핑조치를 철저하게 사용했을 경우 국내 농업의 보호 효과라고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품목별 덤핑마진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국의 수출가격 자료를 중국의 정상가격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중국산 농산물 가격이 반덤핑조치에 의해 상승할 경우 중국 농산물 수입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계측하였다.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량이 감소하면 국산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이것이 다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선행 연구(1997 이재옥 외,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평가와 수입관리정책 방향', R364)에서는 농산물 수입량의 변화에 따른 국산 농산물 가격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농산물간의 품질과 소비자 선호도의 차이로 인하여 소비대체가 완벽하지 못하며, 국내외 농산물은 각각 상이한 시장과 가격하에서 판매된다는 가정이었다. 즉, 수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수입 농산물과 국산농산물간의 불완전 대체를 통해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생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로 인한 국내 농업보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① 경지면적의 변화(%) :

수입가격의 변화율($\%$) $\times$ (수입가격에 대한 수입량의 탄성치) $\times$ (수입량에 대한 국산 농산물 가격의 탄성치) $\times$ (가격에 대한 경지면적 탄력치)

② 농가소득의 감소(%) :

경지면적의 변화율($\%$) + 국산 농산물 가격의 변화율($\%$)

위의 식에서 중국산 농산물의 품목별 수입가격에 대한 수입량의 탄성치는 국산 농산물보다 가격탄성치가 50% 이상 클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품목별 중국산 농산물 수입량에 대한 국산 농산물 가격의 탄성치와 가격에 대한 식부면적 탄성치는 선행 연구(1989 이재옥 외('농산물 수입자유화 중장기 대책에 관한 연구', 1997 이재옥 외)의 결과를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4.2.2.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따른 국내 영향

1993~2003년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주요 농산물의 수입추이는 아래의 표 4-27에서와 같다. 수입에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옥수수, 쌀, 대두를 포함한 곡류이고, 다음으로는 땅콩과 참깨를 포함한 채유종실, 고추, 마늘 등의 채소류 등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쌀, 옥수수, 밀, 대두, 녹두, 팥 등 곡물류와 양파, 마늘, 생강, 고추 등 채소류, 땅콩, 참깨, 계피, 감초 등을 영향계측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각 품목의 제3국의 가격 인용은 중국과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로 선정하였고, 중국과 제3국의 우리나라로의 수출가격은 1999~2003년의 평균가격을 사용하였다(수출가격=수출액/수출량). 제3국과 중국의 수출가격 비교에서 쌀, 밀, 팥, 고추, 계피 등은 오히려 중국의 수출가격이 높았고, 또한 대두는 현재 관세할당물량을 자발적으로 확대하여 수입하는 품목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 품목 역시 영향계측에서 제외하였다. 땅콩의 경우 제3국의 수출가격은 특수한 형태의 땅콩이 일관성 없게 수입되었던 관계로 중국과의 수출가격 격차가 크게 난 것으로 보인다.

표 4-27. 한국의 대중국 주요 농산물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품목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630	505	14	51	497	360	192	703	361	722	1,045
-옥수수	611	486	4	12	179	337	136	660	299	636	908
-쌀	0	0	0	32	10	16	49	37	18	22	36
두류	11	29	11	16	11	11	19	25	28	31	37
-팥	7	18	8	10	8	6	8	12	13	8	12
-대두	0	4	0	1	1	3	8	10	12	19	20
채유종실	44	65	62	88	45	28	67	53	39	61	80
-땅콩	9	10	7	14	23	15	21	21	19	20	22
-참깨	29	44	44	60	11	6	37	26	16	29	43
과실류	6	8	22	34	34	9	11	20	24	29	30
-복숭아	4	1	5	7	5	2	1	1	2	2	1
-사과	0	0	0	3	1	0	0	0	1	1	1
채소류	18	63	50	65	66	61	72	77	92	96	166
-마늘	1	31	8	9	12	15	15	9	6	15	15
-고추	1	1	13	19	9	14	11	10	14	12	39
버섯류	8	8	10	9	10	5	8	9	8	10	10
-양송이	1	2	1	5	3	2	5	5	4	7	8
한약재	36	31	48	64	64	29	37	48	37	35	32
-감초	8	4	6	6	6	4	5	5	4	4	2
-계피	1	3	4	5	3	2	2	1	1	1	1
사료	3	3	4	6	10	6	9	10	12	18	33
박류	88	130	101	106	77	28	45	65	66	76	59
식물성유지	6	5	8	5	12	4	4	4	3	6	11
-동유	5	-	7	5	11	4	4	4	2	4	4
소오스류	2	4	8	17	19	15	21	29	37	40	47
-혼합조미료	0	0	1	5	8	9	10	11	14	15	13
주류	17	33	8	2	11	16	2	16	24	9	29
-에틸알코올	15	30	6	0	9	15	0	13	21	6	25
과자류	1	2	1	3	7	5	6	16	25	29	31
-비스킷	0	0	0	0	1	1	0	6	11	13	13
-곡류조제품	0	1	0	0	3	2	2	3	3	3	3
-캔디	0	0	0	0	0	0	1	2	4	6	8
면류	12	13	19	21	24	19	21	22	24	29	29
-당면	11	12	17	18	21	18	20	20	21	23	21
기타농산물	24	34	47	45	46	26	38	55	66	75	86
농산물 합계	906	933	413	532	933	622	552	1,152	846	1,266	1,725

표 4-28. 주요 중국산 농산물의 제3국과의 수출가격 비교(1999~2003)

단위: 미 달러, %

품목	제3국의 수출가격(A)		중국의 수출가격 (B)	가격비율 (A-B/B)
	국가명	수출가격		
쌀	태국	0.21	0.31	-32.5
옥수수	브라질	0.12	0.11	6.4
밀	인도	0.11	0.11	-2.9
대두	브라질	0.22	0.18	20.5
녹두	미얀마	0.17	0.15	10.6
팥	우즈베키스탄	0.12	0.37	-67.9
양파	필리핀	0.16	0.15	5.2
마늘	인도네시아	0.66	0.50	32.8
생강	미얀마	0.41	0.25	62.4
고추류	우즈베키스탄	1.42	1.52	-6.6
당근	대만	0.44	0.31	42.5
낙화생	기타국	15.07	0.44	3,335.0
참깨	태국	1.05	0.78	35.2
계피	인도네시아	0.74	0.81	-9.3
감초	이란	0.61	1.54	-60.3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9~2003.

표 4-29. 덤핑관세 부과 시 국내 가격 및 경지면적의 변화율

단위: %

품목	가격변화율 (A) ¹⁾	수입가격에 대한 수입량 탄력치(B) ²⁾	수입량에 대한 국산 농산물 가격 탄력치(C) ³⁾	국산농산물 가격에 대한 경지면적 탄력치(D) ⁴⁾	국산농산물 가격변화율 (A×B×C)	경지면적 변화율(A× B×C×D)
옥수수	6.4	-0.15	-0.17	0.07	0.16	0.01
녹두	10.6	-0.35	-0.05	0.20	0.20	0.04
양파	5.2	-0.21	-0.04	0.42	0.04	0.02
생강	62.4	-0.01	-0.02	0.25	0.01	0.00
당근	42.5	-0.21	-0.04	0.42	0.35	0.14
땅콩	3,335.0	-0.75	0.00	1.02	2.75	2.80
참깨	35.2	-0.03	-0.04	0.28	0.04	0.01

주: 1) 제3국의 수출가격과 중국의 수출가격과의 격차

2) 중국산 농산물의 가격에 대한 수입탄력치로서 국산 농산물의 가격탄성치보다 50% 이상 더 탄력적이라는 가정

3) 중국산과 국산 농산물은 품질 차이로 인하여 완전대체품이 아니라는 가정

자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수입자유화 중장기대책에 관한 연구』, 1989.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 평가와 수입관리정책 방향』, 1997.

3)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9~2003.

우리나라가 만약 제3국의 수출가격을 덤핑판정의 기준가격으로 설정하여 액면 그대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 농업의 보호 효과는 <표 4-30>에서와 같이 22억원 가량으로서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이나 무역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할 경우 상실하게 되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제3국의 수출가격과 중국산 수출가격의 격차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대적인 비교우위와 경쟁력에서도 비롯되는 바가 큰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격격차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반덤핑조치를 단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수지의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

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액면 그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아래 표에 계상된 반덤핑 조치의 효과(시장경제 인정 시 국내 농업의 보호 효과 상실)는 최대한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우리나라가 만일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더라도 중국이 국내가격(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출을 할 경우 우리나라는 덤핑부과의 권리를 모두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의 보호 효과 계측은 과대 계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30. 덤핑관세 부과 시 농가소득 변화율

단위: 백만 원, %

품목	국산 농산물 가격변화율 (A)	경지면적 변화율 (B)	소득변화율 (A+B)	1999/01 평균생산액 (C)	소득 변화액 (A+B)×C
옥수수	0.16	0.01	0.18	36,474	64
녹두	0.20	0.04	0.24	10,866	26
양파	0.04	0.02	0.06	291,050	175
생강	0.01	0.00	0.01	42,539	4
당근	0.35	0.14	0.49	97,418	479
땅콩	2.75	2.80	5.55	22,865	1,268
참깨	0.04	0.01	0.06	241,658	135
합계	5.97	3.18	9.15	1,648,842	2,151

- 자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수입자유화 중장기대책에 관한 연구』, 1989.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 평가와 수입관리정책 방향』, 1997.
 3)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9~2003.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 방향』, 2003.

제 5 장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따른 대책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상호 비교

개방정책의 채택과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조치, 그리고 상계관세 제도가 있다. 이들 조치는 산업피해가 상대 수출국의 덤핑행위와 부당한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공정한 무역에도 불구하고 수입 급증이 이루어져 산업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산업피해의 원인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만약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여 반덤핑 관세조치의 발동에 제약을 받을 경우 이를 대체하여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성격과 장단점, 한계성 등을 반덤핑 관세조치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반복하여 강조한 바와 같이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반덤핑 관세제도는 운영 목적이 상이하고 대응조치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반덤핑 관세제도의 대체적인 제도가 될 수 없으며 사례에 따라, 또는 농가피해의 발생 원인에 따라 각각의 조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관세제도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면 다음의 표에서와 같다.

표 5-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비교

	긴급수입제한조치 (SG)	반덤핑 관세제도
제소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상품의 수입증가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 관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상품의 덤핑수입 사실(수출국의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 -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우려,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 관계
신청인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해당 산업의 20% 이상의 생산자(5인 이상의 농업생산자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핑수입상품과 동종 상품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 생산자 단체, 협회, 조합 등 - 해당 산업의 주무부장관
제소처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조사기관	무역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결정 : 무역위원회 - 산업피해 유무 : 무역위원회 - 덤핑 여부 및 덤핑률 : 관세청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지, 현지 조사, 공청회 및 관계 행정기관 자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지, 현지 조사, 공청회 및 관계 행정기관 자료 등
처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 30일 - 피해조사 및 피해 유무판정: 120일 - 구제조치 건의: 30일 - 구제조치: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 결정: 60일 - 예비조사 및 판정: 90일 - 본조사 및 최종판정: 90일 - 구제조치시행: 30일
구제조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 조정 - 비관세: 수입제한 -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핑관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부장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양허 철회 또는 수입제한 시 GATT 통보 및 이해 당사국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T 덤핑방지조치위원회 통보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제32조-제43조 - 동법 시행령 제64조-제78조 -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10조 -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8 - 덤핑방기관세 및 상계관세 운영규정

우선 제소요건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수입 급증에 의한 산업피해의 발생, 또는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그야말로 일시적인 피해로 한정된 반면, 반덤핑 관세제도의 경우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등 중장기적 산업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한시적 세이프가드(TSG; Transitional Safeguard)제도는 해당상품(중국산)의 수입 증가로 시장교란 또는 시장교란의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타 WTO회원국의 TSG로 무역전환 또는 무역전환 우려가 있을 때로 국한한 특수한 제도이다.

신청인 자격에서는 반덤핑 관세제도의 경우 덤핑수입 상품과 동종 상품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로 되어 있는 반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해당 산업의 20% 이상의 생산자로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신청의 비중을 낮추고 있다. 이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피해 발생에 대한 대응조치가 상대적으로 긴급하게 요구되어 피해신청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과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대부분 농산물에 국한되는 반면 농민의 경우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결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5인 이상 농업생산자집단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다.

제소의 처리기간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조사개시에서 구제조치까지 최장 210일이 소요되는 반면, 반덤핑 관세조치는 270일이 소요되어 세이프가드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가 마무리되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TSG제도의 경우 이해관계국과 사전협의(60일 이내)를 거쳐야 하는데 수입국의 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조치 시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세 가지 제도는 구제조치 이후 WTO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공정무역에 따른 수입 급증과 산업피해에 대한 대응조치이므로 반덤핑 관세제도보다 WTO의 해당 조항이 더욱 엄격하고 수반되는 의무도 무겁다고 할 수 있다.

2.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류와 주요 내용

2.1. GATT 19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

2.1.1. 개념 및 의의

GATT 1947 제19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무역 상대국의 공정무역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나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제법상 사정변경의 원리(the doctrine of changed circumstances)에 기초하고 있으며, 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유보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려는 회피조항(escape clause)의 일종으로서 WTO의 기본목적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GATT 1947 제19조의 주요 내용은 특정 회원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해당 회원국이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회원국 영역 내의 동종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급증했을 경우, 해당 회원국은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및 기간에 해당 WTO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관련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 1)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에 따른 수입수량의 증가,
- 2) GATT 의무의 준수결과에 기인하는 수입수량의 증가,
- 3)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경우에는

- 1) 해당 수입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 전에 WTO 회원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 2) 관련 수출국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출국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보복조치를 허용해야 하며,
- 3)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해당 상품의 모든 수출국에 동등한 수입제한을 가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 요인들로 인하여 WTO 회원국,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기피하는 대신 수출자율규제(VER) 또는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의 쌍무협정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1.2. GATT 19조의 주요 내용

□ 발동요건 및 적용원칙(제2항)

수입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수입 증가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위협이 있으며,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동요건이 충족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되는 모든 당해물품에 대해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 피해 조사의 의무(제3항)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자 하는 수입국은 GATT(1994) 제10조에 의거 이미 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해조사당국의 조사를 통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조사는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합리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에 관한 결정(제4항)

피해조사당국은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당해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모든 관련 요인을 평가해야 한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방식(제5항)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 내에서만 취해질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수량제한이 사용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가 이용 가능한 대표적인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없다.

□ 잠정조치(제6항)

구제조치가 지연되면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입 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그와 같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의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적용기간(제7항)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간만 적용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통고 및 협의(제12항)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자 하는 수입국은 신속히 WTO 산업피해구제위원회에 피해조사 절차의 개시 및 그 이유, 잠정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등을 통고하여야 하며, 이해 당사국간의 협의결과 및 중간검토결과 언급된 보상의 형태 등을 상품교역이사회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2.1.3.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은 기존 GATT 1947 제19조의 규정을 명료화

시켜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고 가급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쟁을 더욱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WTO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덤핑관세나 상계관세 제도와는 달리 공정무역에 대한 규제조치이기 때문에 발동요건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기존 세이프가드 조항이 강화된 것이다. 특히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위협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서 수입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증가량과 증가율, 국내시장점유율, 판매, 생산, 가동률, 이윤, 손실, 그리고 고용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입 증가 이외의 요인들에 의한 국내 산업의 피해 또는 위협이 수입 증가에 의한 것으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위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수량제한이 사용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가 가용한 대표적인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없다. 잠정조치는 조치가 지연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명백한 증거에 따른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잠정긴급수입제한조치(provisional safeguard measure)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후 조사 결과 수입 증가가 심각한 피해나 피해 위협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판정이 있을 경우 신속히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관세인상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잠정조치 적용기간, 최초 발동기간, 연장기간을 모두 합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국가는 그와 같은 의도를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및 관련 회원국들에게 통고해야 하며, 관련 회원국들은 해당 조치가 그들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적절한 무역보상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취해진 어떠한 긴급조치도 GATT 1994의 제19조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모색할 수 없다. 특히 수출입에 있어서 수출자율규제, 시장 질서유지협정, 혹은 그와 유사한 조치도 모색하거나 또는 유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은 협정의 일반적 이행을 감독하고 절

차적인 요건이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그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회원국에게 심각한 피해의 방지나 구제를 위하여 또는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 또는 보조금을 이용할 재량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제도운용상 상당한 신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조치의 강도가 경감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2.1.4.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사례(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무역위원회는 1999년 9월 30일 농협중앙회의 산업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동년 10월 11일 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내용에 포함시켰다.

-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 관계 여부
- 국내 산업의 범위
- 수입 증가 및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여부
-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여부
-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간의 인과 관계 성립 여부

한편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결 이전 국내 마늘농가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이익과의 관계 및 국제 통상 차원의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0일 동안 수입품 중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285%의 긴급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해서 부과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한 것이다. 1996년 이후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입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국산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국산품의 재고가 증가하고, 국내 마늘산업의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하에 잠정조치를 결정하였다.

1)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 여부

중국산 수입마늘 중 신선·냉장 마늘은 국산품과 물리적 특성, 성분, 용도 등에서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동종물품이며 수입품 중 냉동, 건조, 일시저장 및 초산조제 마늘은 신선·냉장 마늘을 단순 가공한 것에 불과하여 상업적인 용도에 있어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국산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2) 수입 증가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여부

UR 협상 당시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늘의 대부분이 통마늘 상태로 유통되었으나 최근 들어 깎마늘 상태로 유통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수입마늘도 깎마늘 상태로 수입되는 추세에 있는바 중국은 한국과의 인건비 차이에 따라 깎마늘에 경쟁력이 있으며 이는 최근 깎마늘 수입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국내 마늘유통 거래 형태의 변화와 깎마늘의 수입 증가에 대해 예상했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무역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냉동마늘 및 초산마늘은 관세양허협상 당시 국내 수요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고 국제거래도 거의 없었으나 UR 협상의 결과 신선·냉장 마늘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적용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출업자들이 제조, 수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무역위원회가 냉동마늘 및 초산마늘의 수입 급증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결론지었다.

3)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무역위원회는 수입 증가에 따른 마늘 재배 농가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와 관련하여 피해조사 대상기간 중 ①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의 증가, ②

국내 마늘가격의 하락, ③ 국산마늘 재고량의 증가, ④ 국내산 마늘의 판매액 감소, ⑤ 단위 면적당 마늘산업의 순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간의 인과 관계 성립 여부

무역위원회는 수입 증가가 국내가격 하락 또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절별 가격 상승의 억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과거 5년간 평균가격 지수와 최근의 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과거 5년간의 가격지수의 월별 변화의 경우 생산시기인 6월에 마늘가격이 가장 낮은 반면, 이후 저장비용 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계절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최근('98.6~'99.9)의 가격지수의 변화는 1998년 12월 이후 오히려 급격히 하락하는 등 과거 5년간의 가격지수의 변화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동기간 중 마늘의 수입 증가가 국산마늘의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1999년 6월 이후의 마늘 가격 하락에는 수입 증가와 함께 생산 증가도 동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에 수입된 물량의 대부분이 국산 마늘가격의 30%에 불과한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임을 고려할 때 수입 증가와 국내가격 하락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조치 판정의 내용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를 종료하고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건의를 결정한바 재정경제부는 다음과 같은 긴급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였다.

- 기간: 2000년 6월 1일~2003년 5월 31일(3년)
- 품목 및 관세율
 - 간마늘: 376%의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60%(또는 300원/kg)의 긴급관세 부과(총 436% 또는 2,180원/kg)

표 5-2. 마늘 세이프가드 발동 경과와 조치

제소일 (제소자)	대상품목 (주요수입국)	조사 및 판정	구제조치
99.9.30 (농협중앙회)	마늘 (중국, 미국, 일본 등)	<p>산업피해조사 개시(제144차 무역위, 99.10.11) 잠정구제조치 건의(제145차 무역위, 99.10.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마늘: 315%(기본30% 포함) - 초산조제마늘: 315%(기본30% 포함) <p>99.11.16 재정부 잠정조치 00.1.12 공청회 개최 00.2. 2 산업피해 최종판정 00.3.15 구제조치 건의(제151차 무역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칸마늘 60% 또는 300원/kg,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 285% 또는 1707원/kg - 두 번째 해부터 매년 첫째 긴급관세율의 4/100만큼 인하 <p>00.6.1 재정부, 긴급관세 부과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00.6.1~02.12.31(5개월 단축) - 내용: 중국산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에 대하여 쿼터 설정, 저율관세(30%) 적용 - 사유: 한·중협상결과(00.6~7)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관세 - 60~285% - 00.6.1~02.12.31
01.2.10 (직권조사)	마늘 (중국, 미국, 일본 등)	<p>01.4.21 외교통상부 중국 측과 01년 및 02 연도 쿼터 물량 수입보장 합의</p> <p>01.6. 8 마늘세이프가드 재검토 (제163차 무역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관세 부과조치 현행유지 - 농림부장관은 마늘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강화 - 한·중앙국간 협의(00.4.21) 물량소진에 문제 발생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요재원을 재정에서 확보하여 대처 	[재검토]
02.6.28 (농협중앙회)	마늘 (중국, 미국, 일본 등)	<p>수입제한 연장신청 기각 (제176차 무역위, 02.7.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에 마늘산 업종합대책에 농민 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이 를 확실하게 이행 토록 권고

-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 30%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285%(또는 1,707원/kg)의 긴급관세 부과(총 315% 또는 1,887원/kg)
- 이것은 중국 측의 입장을 고려 긴급관세를 WTO가 규정한 국내외 가격차(냉동 344%, 초산 449%)보다 낮은 수준(30%+285%=315)에서 결정

2.2. WTO 농업협정문의 특별세이프가드조치(SSG)

이 제도는 UR 협상에서 합의한 농산물 관세화조치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WTO 농산물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이며,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관세화농산물로써 자국의 양허표에 SSG라는 기호를 명시한 품목에 한한다. 이 제도의 발동요건은 국내 산업의 피해 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사절차 없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첫째, 양허회원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수량이 제4조의 기존 시장접근기회와 관련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양허회원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가격이 c.i.f.가격 기준으로 자국통화 환산시 발동가격(1986-88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이 제도는 1년 단위로 조치가 가능하며,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나 차기협상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농산물SSG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2004년 8월 1일 채택된 WTO/DDA 농업협상 Modality framework에 따르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현재의 농산물SSG제도의 유지 여부를 계속 협상해 나가기로 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3. 중국 농산물에 대한 한시적 세이프가드 조치(TSG)

한시적 세이프가드(TSG; Transitional Safeguard)제도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6절에 명시된 제도로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WTO 회원국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제도이다. 특정국가에 대하여 이와 같은 특수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최혜국대우를

받게 되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수입국 입장에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WTO 가입 시점부터 12년간(2001. 12. 11~2013. 12. 10) 한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하였다.

TSG조치의 발동요건은 시장교란요건 또는 무역전환요건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이다. 시장교란요건은 중국산의 수입 급증으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무역전환요건은 특정의 WTO 회원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TSG조치를 취함으로써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 제품이 다른 WTO 회원국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사 결과 시장교란 또는 무역전환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치의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 유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는 구제조치로는 관세율 조정, 수입수량 제한 등이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기간은 해당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기간은 최초의 잠정SG조치기간과 연장기간 및 재발동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총 8년을 초과할 수 없다.(WTO SG협약 제7조 규정)

그러나 TSG제도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중국산물품 수입의 상대적 증가로 인해 시행된 경우에는 2년, 그리고 절대적 증가로 인해 시행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게 되면 중국도 이에 상응한 양허 또는 의무이행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TSG제도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기간이 실제로 2년 또는 3년을 초과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중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협의에서 중국산의 시장교란 사실과 대응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국은 이를 방지 또는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수입국이 추가적인 SG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만약 양자협의를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입국은 SG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WTO SG위원회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3. 세이프가드의 활용방안

3.1. 세이프가드조치의 상호 비교

3.1.1. SG와 SSG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농가피해의 방지를 위한 구제조치에는 현행 GATT 1994 제19조에 의한 통상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 외에도 UR 농업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pecial safeguard; SSG)가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과 편의에 따라 양 제도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양 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1) **발동요건의 명확성:** 기존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SSG는 사전 협의의무가 없으며, 다만 조치 발동 후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 세이프가드가 WTO 의무이행의 결과 예기치 못한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라고 하는 불명확한 발동요건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해 SSG는 수입수량의 증가 또는 수입가격의 하락 등 발동기준이 더욱 명확하다.
- 2) **구제조치의 한계:** 기존 세이프가드에서는 양허의 정지를 포함한 관세인상 이외에 수입수량제한도 가능한 반면, SSG에서는 추가적인 관세인상만 허용하고 있다.
- 3) **보복조치의 유무:** 기존 세이프가드는 피발동국의 보복조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SSG에서는 보복조치가 없다.
- 4) **대상 품목 및 적용기간의 한계:** SSG는 관세화 대상 품목에 한해 관세

화 이행 기간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

- 5) **부패성과 계절성이 강한 농산물에 대한 신축적 활용:** SSG에서는 부패성이나 계절성이 높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특정 기준가격 사용을 허용하여 산업피해(우려)의 개념을 현실화 하였다.

물론 현행 SSG제도는 UR합의에 따라 2004년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라 그 존속 여부, 그리고 존속시 내용 수정 여부 등이 결론지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낮아 대부분의 우리나라 농산물은 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크게 높다. 또한 농산물은 대부분 가격비탄력적이기 때문에 SSG제도에 따른 긴급관세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는 우선 수량제한이 가능한 SG제도를 활용하고 SSG제도는 부수적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SG제도는 비농산물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국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다.

3.1.2. SG와 TSG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에 대해 고유한 긴급수입제한제도, 즉 세이프가드 제도를 허용한 관계로, 우리나라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복되어 있는 셈이다. 앞에서 SG와 SSG 제도간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SG와 중국에 대한 특별 긴급수입제한, 즉 한시적 수입제한조치(TSG) 간의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제소요건과 관련하여 TSG는 SG에 비해 타 회원국의 TSG 조치로 인한 무역전환 우려까지를 포함하여 상당히 포괄적인 요건을 제소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TSG는 60일 이내의 이해관계국과의 사전협의, 양자협의를 요청 후 6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될 경우 조치 가능 등으로 SG에 비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TSG는 SG에 비해 제도 운영상 더욱 많은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표 5-3).

표 5-3. SG와 TSG의 상호 비교

	긴급수입제한조치 (SG)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 (TSG)
제소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상품의 수입증가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 관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상품의 수입 증가로 시장교란 또는 시장교란의 우려가 있을 때 - 타 회원국의 TSG로 무역전환 또는 무역전환 우려
신청인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해당 산업의 20% 이상의 생산자(5인 이상의 농업생산자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소처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조사기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지, 현지 조사, 공청회 및 관계 행정기관 자료 등 	
처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 30일 - 피해조사 및 피해 유무판정: 120일 - 구제조치 건의: 30일 - 구제조치: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국과 사전협의(60일 이내) 및 SG위원회 통보 - 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미합의 시 조치 시행 가능
구제조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 조정 - 비관세: 수입제한 -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 조정 - 수입수량 제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양허 철회 또는 수입제한 시 GATT 통보 및 이해 당사국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10일까지 12년간만 유효 - 중국산 제품만 해당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제32조-제43조 - 동법 시행령 제64조-제78조 -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 - “WTO의 특정회원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로 규정

3.2. 세이프가드조치의 활용방안

3.2.1. SG와 SSG 제도의 활용

중국의 저가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농가피해를 적절히 방지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그 밖의 상품에 비해 계절성, 부패성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방향으로 세이프가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산물의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피해구제가 긴급한 경우 예비판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구제절차의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를 사후에 확인하기보다는 발동요건으로서 피해우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무역위원회를 대통령직속의 행정부서로 독립시켜야 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 내에는 농산물의 품목별, 분야별 전문가가 확보되어 무역위원회 자체의 연구 및 조사 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 않은 품목으로서 추가적 관세 부과로 수입제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SG보다는 SSG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SSG의 경우 부패성, 계절성이 강한 농산물에 대해 특정 기준가격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SSG를 원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3.2.2. TSG제도의 활용

중국산 제품에 대한 TSG제도는 발동 요건에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이 시장교란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가능하므로 SG제도보다는 발동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 전인 양자협의 과정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DDA농업협상이 타결되면 수입 농산물의 관세율은 더욱 낮아지게 되

며, 그 결과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증가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이나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한편으로는 TSG제도 등을 통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TSG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관련 법규의 보완이다. SG제도와는 달리 TSG제도는 조치 시행전 60일간 중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조치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물량의 상대적 증가 2년, 절대적 증가 3년)이 경과하면 중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TSG 조치기간이 2 또는 3년을 넘기기 어려워 상대적인 이행 기간 단축으로 인한 실제 효과 감소 가능성이 있다. 현행 국내법규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 후 점진적 완화, 재검토, 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TSG조치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동요건의 명확화이다. TSG조치의 발동요건인 시장교란 또는 무역 전환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보다 명백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TSG 조치의 발동요건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사전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면 무역위원회로부터 보다 신속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SG조치 발동 전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중국과의 양자협약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TSG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품목별 우선순위의 선정이다. 2003년 기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 390여 개 전 품목에 대한 수입량, 국내 생산량, 출하량 및 가격동향 등의 자료를 일정간격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TSG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가 높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WTO 가입 당시 향후 15년 동안 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MES)를 유보하는데 동의하였으나, 국제무역상에서 반덤핑 제소가 잇따르고 판정 과정에서 중국이 비시장경제국이라는 이유로 수입국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공정 대우를 받게 되자 비시장경제국 지위가 수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회원국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가 한중 양국 간의 경제통상협력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통상파트너로서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요청을 경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인정한다면 국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고,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을 때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나아가 반덤핑제도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기존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1.2. 시장경제 판정의 기준

나라마다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경제 운영 체계로 인해 비록 시장경제라고는 하지만 서로 상이한 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경제의 판정 기준은 다분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가 경제 및 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기업의 독립성 보장 여부, 시장기능에 의한 생산요소의 분배와 가격결정 여부, 무역 환경 및 금융시장 여건 구비 여부 등을 공통된 시장경제 판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1.3.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

중국이 WTO 회원국들로부터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될 경우 반덤핑 조치가 더욱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발동될 수 있으므로 중국의 입장에서 비시장경제 지위에서의 탈피는 매우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다.

중국 상무부가 베이징사범대학에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에서 국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33개의 판정 지표를 설정하여 2001년 기준으로 중국의 시장경제 달성도를 측정한 결과 69%가 시장경제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고 판정하였다(통상적으로 60%를 초과하면 시장경제라 판단). 더욱이 중국 정부가 2001년 WTO 가입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 전환을 가속화시켜왔기 때문에 2005년 현 시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시장경제 여건은 더욱 발전된 것이 사실이다.

2005년 3월 말 현재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한 국가는 총 38개국이며, 주요 인정 사유는 중국과의 FTA 체결, 전통적인 우호 관계 유지, 원자재와 식량 등 대중 수출 급증, 외교전략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국가 가운데 교역규모가 비교적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4. 주요국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규제와 사례

중국에 비시장경제국 대우에서 미국은 그 밖의 국가들과는 달리 반덤핑의 조사와 관련하여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취급하는 조건이 매우 엄격한 편이나, EU는 1998년부터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의 명단에서 제외시켜 특수경제국(special economy country)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수경제국은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의 중간단계에 있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중국의 개혁 성과를 일부 인정하여 제한된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러시아(시장경제국)와 베트남(비시장경제국)의 시장경제여건 평가 과정에서 토지제도(토지의 사유화 정도)를 매우 중요한 판정 요인으로 삼았는데, 토지의 사유화정책 실시 여부에 따라 러시아는 시장경제국으로, 베트남은 비시장경제국으로 판정하였다.

1.5. 중국의 농업·농촌시장경제 발전

중국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도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토지제도 건설,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 농업금융 개혁, 농촌법제 건설, 농정 개혁 등 농업·농촌 시장경제 개혁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시장경제화의 핵심 개혁은 정부가 그간 식량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던 수매를 통한 시장개입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완전 개방을 단행한 것이었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에 있어서는 관세의 대폭 감축과 비관세조치의 철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개방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토지제도의 시장화 진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타 WTO 회원국들로부터 비시장경제국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토지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상품의 생산원가 계상에 특혜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어 결국 가격 왜곡을 야기하게 되므로 토지재산권(토지사용권)의 시장화 개혁이 요구되어진다.

1.6. 한·중 농산물 무역의 추세와 문제점

2003년 금액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시장에 농축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영국 등의 순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3년은 전년 대비 9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대 한국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다.

1.7. 우리나라의 반덤핑 제도와 사례

우리나라의 반덤핑 제도의 법적 근거로는 관세법(제51조~제56조)에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반덤핑 제도의 운영은 한국 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는데, 잠정조치의 시행,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수락 그리고 재심사 결정 등 반덤핑관세 제도의 중요 사항에 대한 최종판정은 무역위원회가 판단하여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재정경제부는 필요시 관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체제이다.

1987년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04년 말까지 총 151건의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중 반덤핑 관세조치는 34%에 해당하는 51건이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이프가드 조치에 의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의 수급변동에 따라 수입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보다 효율적이고, 또한 농산물은 덤핑마진의 계산이 어려운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절차를 거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예는 몇 차례 있으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예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1.8. 중국농산물에 대한 타국의 반덤핑 제소 사례

2004년 2월까지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한 것이 600건이 넘어 국제적으로 매 7건의 반덤핑 제소 가운데 1건이 중국제품으로 중국은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이다. 외국으로부터 반덤핑 관정을 받은 중국산 농산물로는 마늘, 벌꿀, 버섯통조림, 농축사과즙 등이 있다.

1.9.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의 부여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했을 경우 중국의 덤핑행위에 대하여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중국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3국의 자료를 사용한 정상가격 산출을 기초로 삼아 중국산 농산물의 품목별 덤핑마진과 반덤핑관세의 수준을 계산하고 반덤핑조치를 단행했을 경우 국내농업 보호 효과를 모두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했을 경우의 비용으로 간주하였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따른 우리 농업에의 영향 계측을 함에 있어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주요 농산물 가운데 중국의 수출가격이 제3국의 가격보다 높은 품목은 제외한 옥수수, 녹두, 양파, 생강, 당근, 땅콩, 참깨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품목의 제3국의 가격 인용은 중국과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로 선정하였고, 중국과 제3국의 우리나라로의 수출가격은 1999~2003년의 평균가격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가 만약 제3국의 수출가격을 덤핑관정의 기준가격으로 설정하여 액면 그대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 농업의 보호 효과는 22억원 가량으로써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이나 무역액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국의 수출가격과 중국산 수출가격의 격차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대적인 비교우위와 경쟁력에서도 비롯되는 바가 큰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격격차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반덤핑조치를 단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수지의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액면 그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이 연구에서 계상된 반덤핑 조치의 효과(시장경제 인정 시 국내농업의 보호 효과 상실)는 과대평가된 최대한의 수준으로 봐야할 것이다.

1.10. 현행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종류와 내용

개방정책과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긴급수입제한조치(SG, SSG, TSG), 반덤핑 관세조치 및 상계관세 제도가 있으며, 이들 조치는 제소요건, 신청인 자격, 처리기간, 운영목적, 대응조치 등이 상이하므로 사례에 따라, 또는 산업피해의 발생원인에 따라 각각의 조치를 적절히 선택적 또는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제도는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normal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될 때 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해당물품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된 특별관세제도이다. WTO 반덤핑협정문은 특히 비시장경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정상가격은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라 볼 수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출할 수 없는 점을 인정, 비시장경제국가의 가격특성을 고려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중국의 덤핑행위에 대하여 조사 방법상 적용할 수 있는 정상가격만 다를 뿐 여전히 반덤핑관세조치는 취할 수 있다.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은 기존 GATT 1947 제19조의 규정을 명료화시킨 것으로 무역 상대국의 공정무역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나 수입국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다. 회원국의 심각한 피해의 방지나 구제 또는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필

요한 한도에서 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 또는 보조금을 이용할 재량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제도운용상 상당한 신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기간이 원칙적으로 4년, 그리고 연장하는 경우에도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시적 세이프가드(TSG; Transitional Safeguard)제도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6절에 명시된 제도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WTO 회원국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제도이다. 특정국가에 대하여 이와 같은 특수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최혜국대우를 받게 되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수입국 입장에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비록 중국의 WTO 가입 시점부터 12년간(2001. 12. 11~2013. 12. 10)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TSG는 일반 SG에 비해 제소요건이나 처리기간 등 제도운영상 더욱 많은 신축성을 확보하고 있다.

1.11. 세이프가드의 활용방안

- **SG와 SSG 제도의 활용:** 중국의 저가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농산물의 경우 그 밖의 상품에 비해 계절성과 부패성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방향으로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농산물의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피해구제가 긴급한 경우 예비판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구제절차의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해를 사후에 확인하기보다는 발동요건으로서 피해우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무역위원회를 독립된 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아울러 무역위원회의 연구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농업전문가(분야별, 품목별)가 확보되어 농산물 수입피해구제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 **TSG제도의 활용:** 중국산 제품에 대한 TSG제도는 발동 요건에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이 시장교란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가능하므로 SG제도보다는 발동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 전인 양자협약의 과정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TSG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 **국내 관련 법규의 보완:** SG제도와는 달리 TSG제도는 조치 시행전 60일간 중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조치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물량의 상대적 증가 2년, 절대적 증가 3년)이 경과하면 중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TSG 조치기간이 2년 또는 3년을 넘기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이행 기간 단축으로 인한 실제 효과 감소 가능성이 있다. 현행 국내법규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 후 점진적 완화, 재검토, 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TSG조치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발동요건의 명확화:** TSG조치의 발동요건인 시장교란 또는 무역전환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보다 명백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TSG조치의 발동요건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사전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면 무역위원회로부터 보다 신속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SG조치 발동 전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중국과의 양자협약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TSG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품목별 우선순위 선정:**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량, 국내 생산량, 출하량 및 가격동향 등의 자료를 일정한격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TSG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가 높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결론

중국은 WTO 가입이후 국제교역상에서 비시장국가라는 것이 국익 증대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으며, 이에 따라 시장경제국가의 지위 획득을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제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대외적으로는 교역대상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관계 개선에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일본, 한국, 호주 등 국가로부터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적인 노력으로 중국은 최근 3,000여 개의 법과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 건설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최근 시장경제원리가 폭넓게 도입되어 대부분의 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대체국을 찾기도 쉽지 않아 중국을 무조건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최근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중요한 통상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는 중대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고,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을 때 국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기존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중국의 덤핑행위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제3국의 자료를 적용할 수 없고 중국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따른 국내 농업에의 영향 계측은 제3국의 자료를 사용한 정상가격 산출을 기초로 삼아 중국산 농산물의 품목별 덤핑마진과 반덤핑관세의 수준을 계산하고 반덤핑 관세조치를 단행했을 경우 국내농업 보호 효과를 모두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했을 경우의 비용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계측 결과 우리나라가 만약 제3국의 수출가격을 덤핑판정의 기준가격으로 설정하여 액면 그대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 농업의 보호 효과는 22억원으로써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이나 무역액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국의 수출가격과 중국산 수출가격의 격차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대적인 비교우위와 경쟁력에서도 비롯되는 바가 큰 것일 가능성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흑자 지속에 따른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인해 액면 그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이 연구에서 계상된 시장경제 인정 시 국내농업의 보호 효과 상실 부분은 다소 과대 계상된 면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중국의 덤핑행위에 대하여 조사 방법상 적용할 수 있는 정상가격만 다를 뿐 여전히 반덤핑관세조치는 취할 수 있으므로 반덤핑관세조치를 비롯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SG),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SSG),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TSG) 등 제도를 산업피해의 발생원인에 따라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구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저가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무역위원회 내 연구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농업전문가를 확보하여 농산물 수입피해구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문>

- 권오복, 정정길.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 연구보고 R4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고지마 레이즈. “중국의 WTO 가입과 그 영향”, 『국제식량농업』 제42권 제12호, 2000.12.
- 김정호 외. 『중국 농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국 농업의 중장기 비전』, 연구보고 C2003-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김형모. 『중국의 농림수산물생산과 한·중교역 전망 및 수출경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호. “WTO 가입이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농산물의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농경토론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 통상자료』, 1990-1992.
- 박은철, 정문섭. “한·중 농업경쟁력 비교 및 우리의 전략적 대응 방안”, 2004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 2004.
- 서소청. “중국 농업구조조정 강화와 농산물 경쟁력 제고”,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제2회 한중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 손동승. “경제 세계화, 비교우위 및 중국 농산물 무역”,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제2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1.
- 어명근 외.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연구보고 R4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어명근 외. 『한·중·일 FTA 농업 부문 파급 효과 예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유진석. 중국의 WTO 가입 및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1999.
- 윤석원 외. 중국의 WTO 가입과 농업 분야의 파급 효과, 월례세미나시리즈 No. 80. 농정연구포럼. 2000. 2.
- 이재욱 외. 『농산물 수입자유화 중장기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보고, 1997

- 이재욱 외.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평가와 수입관리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364 1997
- 이한주. 중국의 WTO 가입과 우리 농업, CEO Focus 제56호,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9. 12.
- 임정빈, 어명근, 김태곤, 정정길.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기과제, W-4. 1999.
- 임정빈, 이재욱. 2001.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국내외 영향 및 대응 방안”, 농촌경제 제24권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이성귀. 『중국의 중단립종 쌀 생산·수출 잠재력』, 정책보고 P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정정길 외. 『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 연구보고 R4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정정길, 이재욱. 2001. “중국농업의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업전망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지준. “WTO 체제하의 중·한 농업협력 전망”,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제2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1. 6.
- 최세균 외. “한·중 농산물 교역현황과 전망”,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농업협력』, 제2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1.6.
- 최용규 외.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농업』, 200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농산물 수입 적정관리를 위한 TSG제도 활용 방안 연구』, 세계농정연구원, 1999.
- 황계곤. “WTO 가입이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2000.

<영문>

- Chae, W. and Hongyul Han,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KIEP, KIEP working paper 01-02, 2001.
- Colin, A. C and Xianghong L, 『Economic Reform and Changing Pattern of China's Agricultural Trade』,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1999.
- FAO,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 Resource Manual, 2000.

- Gale, F. 'Subsidized Corn Exports Help Price Rebound', China : Agriculture in Transition, ERS/USDA, 2001.2.
- Hsu, H. 'Policy Changes Continue To Affect China's Oilseeds Trade Mix', China : Agriculture in Transition, ERS/USDA, 2001.2.
- Hsu, H. and Liu, G. 'Tradeoffs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China's Rice', China : Agriculture in Transition, ERS/USDA, 2001.2.
- Hsu, H. and Gale, F. 'USDA Revision of China Grain Stock Estimates', China : Agriculture in Transition, ERS/USDA, 2001.2.
- Huang Yiping, 『Agricultural Reform in China』, Cambridge Univ. Press, 1998.
- Lejun, W. 'WTO Rules and Perfection of China's Agricultural Legislation', 1999.
- Lohmar, B. 'China's Continued Growth Leaves Agriculture Facing Changes', China : Agriculture in Transition, ERS/USDA, 2001.2.
- Lohmar, B. 'Changes in Labor, Land, and Credit Markets Lead China's Farmers on the Path Toward Modernization', China : Agriculture in Transition, ERS/USDA, 2001.2.
- Martin, W. 'WTO Accession and China's Agricultural Trade Policies', World Bank, 1999.
- Stoler, Andrew L. , "Treatment of China as a Non-Market Economy: Implications fo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Impact on Chinese Company Operations in the WTO Framework", presented at the 'Forum on WTO System and Protectionism: Challenges China Faces After WTO Accession', 2003
- Tuan, F. and Hsu, H. 'U.S.-China Bilateral WTO Agreement and Beyond', China : Agriculture in Transition, ERS/USDA, 2001.2.
- Tuan, F. and Cao, Q. and Peng, T. 'Livestock Production Competitive, But Export Remain Small', China : Agriculture in Transition, ERS/USDA, 2001.2.

<중문>

- 中国社会科学院农村发展研究所, 国家统计局农村社会经济调查总队. 2004. 『农村经济绿皮书: 2003~2004 中国农村经济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北京师范大学经济与资源管理研究所. 2003. 『2003 中国市场经济发展报告』, 中国对外经

济贸易出版社.

- 国家统计局. 1998. 『成就辉煌的20年』, 中国统计出版社.
- 卢文 外. 1997. 『中国农村：开放与发展』, 中国农业出版社.
- 翁鸣 外. 2003. 『中国农业竞争力研究』, 中国农业出版社.
- 李纯英. 1998. 『农村经济发展研究』, 中国农业出版社.
- 张红宇 外. 1995. 『国民经济成长中的中国农业』, 新华出版社.
- 程国强, 孙东升. 1998. “中国农业政策改革的效应”, 《经济研究》, 1998年 第4期.
- 朱若峰. 1997. 『中国农业的变革与发展』, 中国统计出版社.
- 国务院发展研究中心. 1993. 『中国农村土地制度的变革』, 北京大学出版社.
- 中央财经领导小组办公室. 2001. 『农村政策简明读本』, 中共中央党校出版社.
- 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 『中国农业发展报告(各년도)』, 中国农业出版社.
- 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 1999. 『中国农村50年』, 中原农民出版社.
- 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 1989. 『中国农村40年』, 中原农民出版社.
- 中国统计年鉴. 各年度. 国统计出版社.
- 山本修编. 1985. 『农业政策の展开と现状』, 家の光协会.
- Ryoshin Minami. 1994.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The Macmillan Press Ltd.
- 中国国务院发展研究中心, 『中国加入WTO对世界经济及其自身的影响』, 研究报告, 1999.

11.

<인터넷사이트>

<http://www.bok.or.kr>

<http://www.ers.usda.gov>

<http://www.fao.org>

<http://www.fas.usda.gov>

<http://www.kati.net>

<http://www.krei.re.kr>

<http://www.maf.go.kr>

<http://www.nonghyup.com>

<http://www.nso.go.kr>

<http://www.usda.gov>

C2005-5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의미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5. 5.

발 행 2005. 5.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